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특별기획: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 수립 국민인식조사

2023. 03. 24.

담당자 | 질병관리청 대변인실 유은태 주무관

e-mail | yet419@korea.kr

이동한 수석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특별기획: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 수립 국민인식조사

- 본 조사의 주관기관은 질병관리청, 수행기관은 한국리서치입니다. 설문 자문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에서 진행했습니다. 본 조사 내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담당자(대변인실 유은태 주무관, yet419@korea.kr)에게 문의 바랍니다.

조사주관 | 질병관리청 대변인실 유은태 주무관
e-mail | yet419@korea.kr

조사수행 | 이동한 수석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 수립 국민인식조사

여론 속의
여輿論論



조사목적

- 최근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는 짧아지고, 그 규모는 커지는 추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5년 이내 팬데믹 발생할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한다. 반면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은 장시간 소요됨을 고려 시, 미래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전략의 신속한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경험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래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대응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향후 감염병 유행 시 주요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꼭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고, 국가가 강화해야 할 역량은 무엇인지 등)과 수용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1 코로나19 위험성

현재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낮다 37.5%, 높다 9.5%

코로나19 감염 시 건강피해 심각하지 않을 것 같다 29.5%, 심각하다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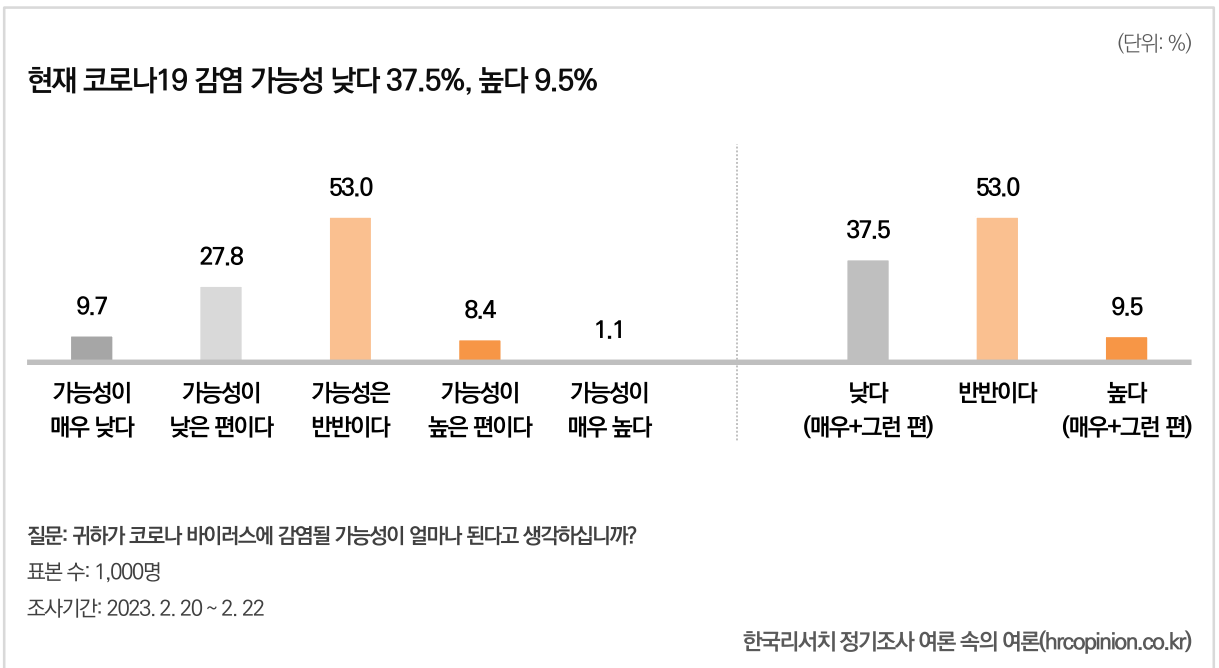
코로나19, 현재 한국에 심각하지 않은 작은 위협이다 61.5%

감염 가능성, 감염 시 건강피해 예상, 코로나19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 않으며, 위험하지 않다고 보는 인식이 우세하였다.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을 ‘반반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전체의 53.0%인 가운데,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다’는 사람(37.5%, 매우 낮음 9.7%, 낮은 편 27.8%)이 ‘가능성이 높다’는 사람(9.5%, 매우 높음 1.1%, 높은 편 8.4%)보다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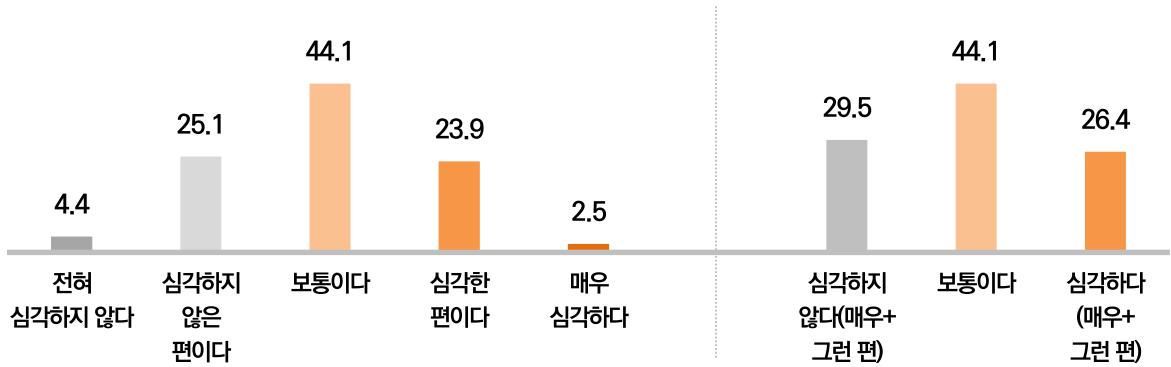
코로나19 감염 시 건강영향이나 피해에 대해서도 ‘심각할 것’이라는 사람은 26.4%(매우 심각 2.5%, 심각한 편 23.9%)로 네 명 중 한 명에 그쳤다. ‘보통’이라는 사람이 44.1%로 가장 많았고,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은 29.5%(전혀 심각하지 않다 4.4%,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25.1%)였다.

코로나19가 현재 우리나라에 ‘(심각한) 큰 위협’이라고 보는 사람은 전체의 30.6%인 반면, ‘(심각하지 않은) 작은 위협’으로 보는 사람은 두 배가 넘는 61.5%였다. ‘전혀 위협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4.6%)까지 포함하면, 세 명 중 두 명 정도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큰 위협은 아니라는 인식인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시 건강피해 심각하지 않을 것 같다 29.5%, 심각하다 26.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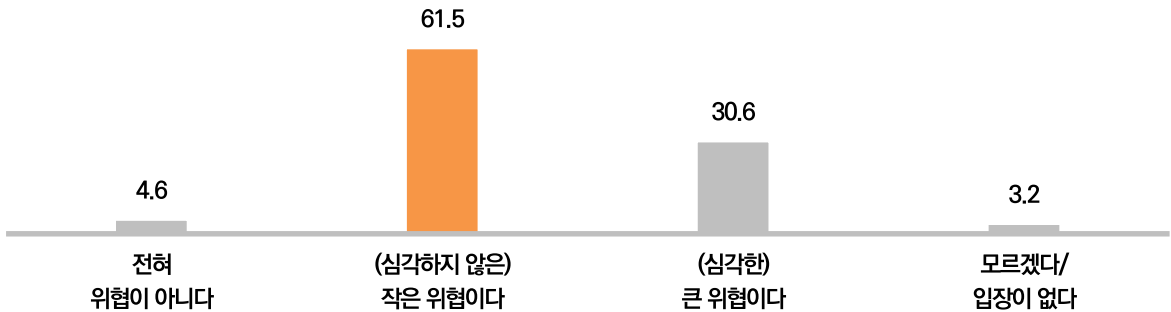
질문: 귀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건강영향이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할 것 같습니까?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2. 20 ~ 2. 22

(단위: %)

코로나19, 현재 한국에 심각하지 않은 작은 위협이다 61.5%



질문: 코로나19는 한국에 어느 정도의 위협입니까?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2. 20 ~ 2. 2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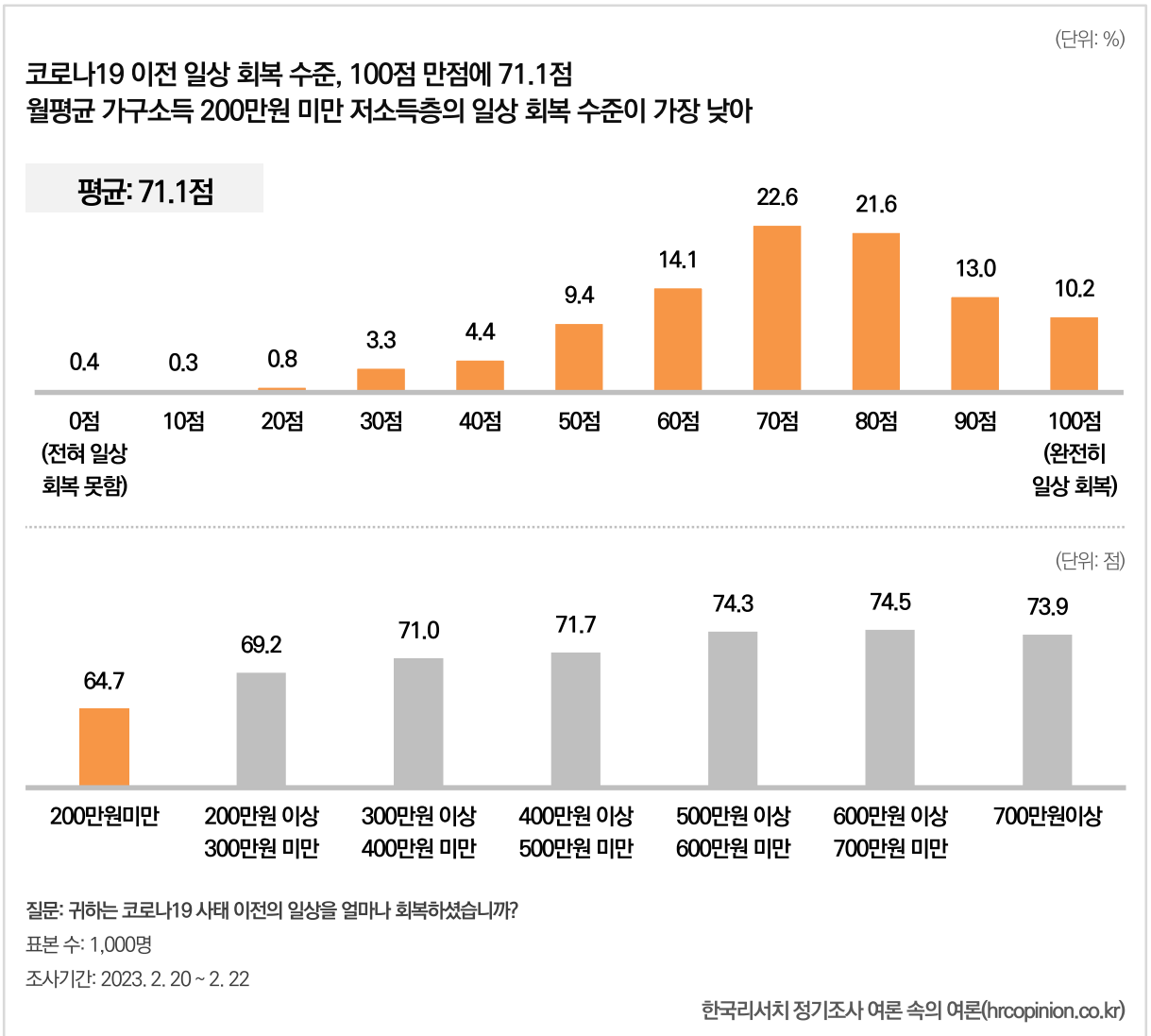


2 코로나19 회복도

코로나19 이전 일상 회복 수준, 100점 만점에 71.1점 10명 중 9명은 아직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일상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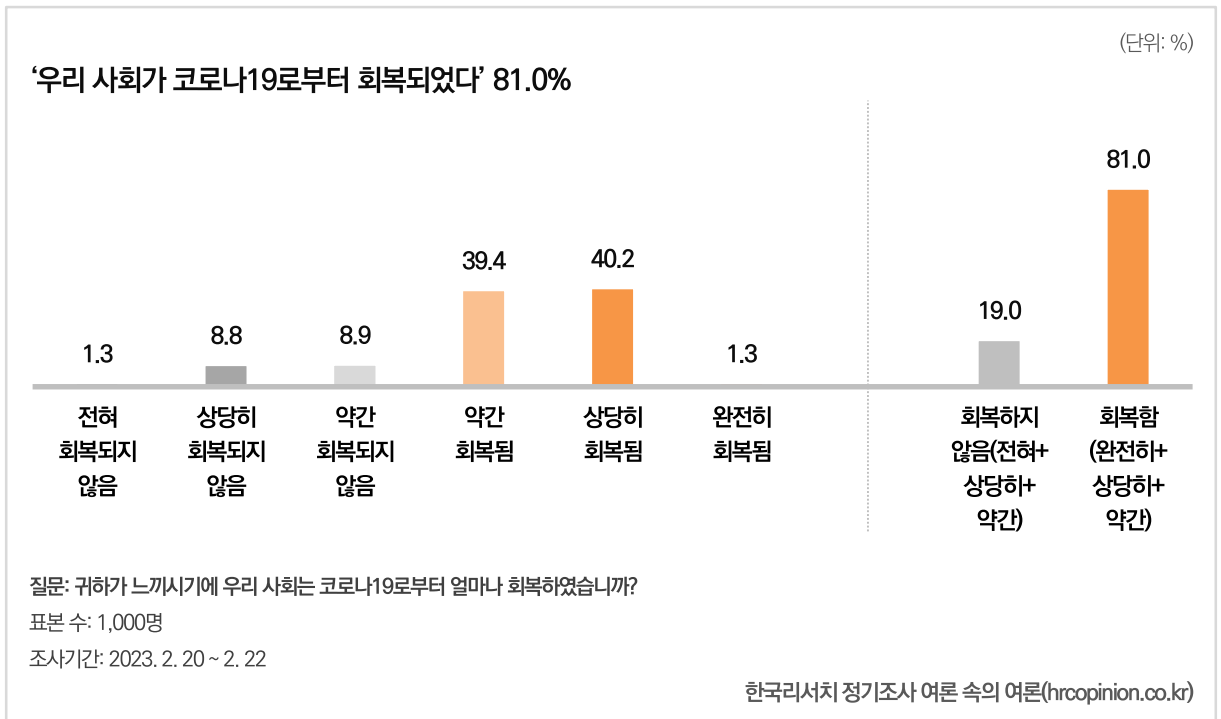
스스로 평가했을 때,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일상을 회복했다는 사람은 10명 중 1명(10.2%)에 그쳤다. 다만, 전체 응답자 세 명 중 두 명(67.4%)는 일상 회복 수준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평가해, 일상 회복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일상 회복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1.7점이었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점수는 64.7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에서의 일상회복 점수는 74.3점 이상으로, 10점 가까이 차이가 났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일상회복 속도가 더뎠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었다’ 81.0%

응답자 10명 중 8명(81.0%)은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었다’고 인식하였다(약간 회복됨 39.4%, 상당히 회복됨 40.2%, 완전히 회복됨 1.3%).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는 사람은 소수이나, 우리 사회가 회복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데에는 다수가 동의하는 상황이다. 19.0%만이 아직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약간 회복되지 않음 8.9%, 상당히 회복되지 않음 8.8%, 전혀 회복되지 않음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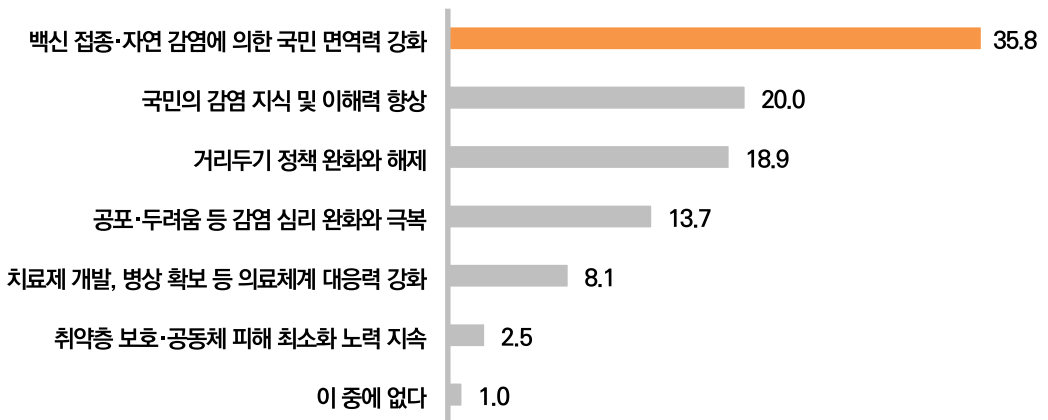


우리 사회 회복에 기여한 변화, '백신 접종·자연 감염에 의한 국민 면역력 강화' 우리 사회 회복을 어렵게 만든 것,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 지속'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었다고 보는 사람 중 35.8%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자연 감염에 의한 국민 면역력 강화'를 꼽았고, '국민의 감염 지식 및 이해력 향상(20.0%)', '거리두기 정책 완화와 해제(18.9%)' 등이 뒤를 이었다. 18-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백신 접종·자연 감염에 의한 국민 면역력 강화'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5.6%가 면역력 강화를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답했다. 반면 18-29세 응답자 중에서는 29.9%가 '거리두기 정책 완화와 해제'를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언급해, 다른 연령대와 차이를 보였다.

(단위: %)

백신 접종·자연 감염에 의한 국민 면역력 강화, 우리 사회 회복에 가장 크게 기여한 변화



우리 사회 코로나19로부터 어느 정도 회복	사례수 (명)	백신 접종·자연 감염에 의한 국민 면역력 강화	국민의 감염 지식 및 이해력 향상	거리두기 정책 완화와 해제	공포·두려 움 등 감염 심리 완화와 극복	치료제 개발, 병상 확보 등 의료체계 대응력 강화	취약층 보호·공동 체 피해 최소화 노력 지속	이 중에 없다	계
전체	(810)	35.8	20.0	18.9	13.7	8.1	2.5	1.0	100.0
연령									
18-29세	(140)	26.3	11.9	29.9	17.2	10.9	1.6	2.1	100.0
30대	(117)	27.2	12.9	20.2	23.3	8.9	4.7	2.7	100.0
40대	(150)	38.7	19.5	19.9	10.1	7.2	3.9	0.7	100.0
50대	(155)	32.5	28.0	15.8	10.9	9.3	3.0	0.5	100.0
60세이상	(248)	45.6	23.2	13.4	11.1	5.9	0.8	0.0	100.0

질문: 어떤 변화가 우리 사회의 회복에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한 가지 골라주십시오.

표본 수: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8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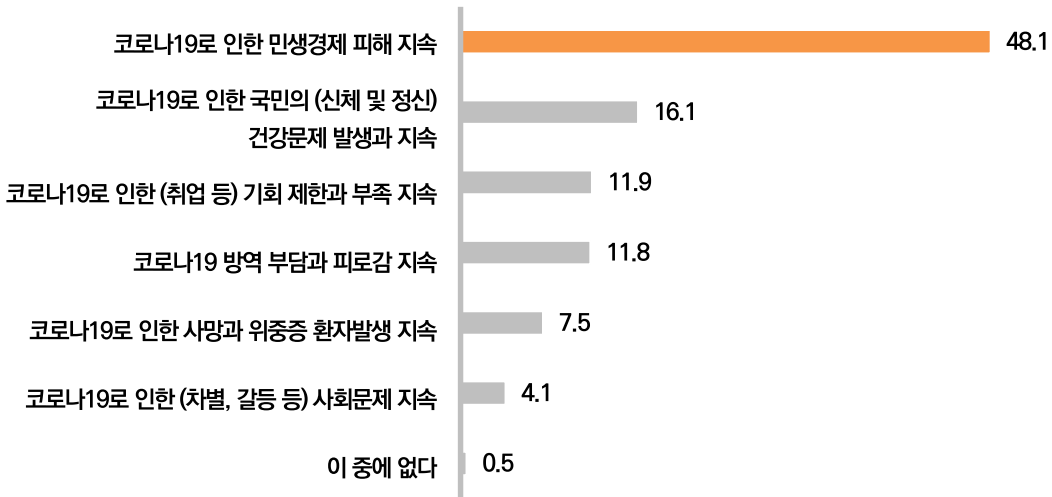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3. 2. 20 ~ 2. 2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반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에는 48.1%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 지속’이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는 의견이었고, 16.1%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신체 및 정신)건강문제 발생과 지속’을 주요 이유로 언급하였다.

(단위: %)

코로나19로 지속되는 민생경제 피해, 우리 사회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우리 사회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지 못함	사례수 (명)	코로나19 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 지속	코로나19 로 인한 국민의 (신체 및 정신) 건강문제 발생과 지속	코로나19 로 인한 (취업 등) 기회 제한과 부족 지속	코로나19 방역 부담과 피로감 지속	코로나19 로 인한 사망과 위중증 환자발생 지속	코로나19 로 인한 (차별, 갈등 등) 사회문제 지속	이 중에 없다	계
전체	(190)	48.1	16.1	11.9	11.8	7.5	4.1	0.5	100.0
연령									
18-29세	(26)	37.3	10.0	14.0	13.4	21.3	4.1	0.0	100.0
30대	(34)	43.6	18.7	14.4	23.3	0.0	0.0	0.0	100.0
40대	(34)	48.7	14.0	15.8	10.5	5.7	5.2	0.0	100.0
50대	(39)	44.7	22.5	12.4	7.8	5.1	4.9	2.6	100.0
60세이상	(57)	57.7	14.2	6.9	7.6	8.3	5.3	0.0	100.0

질문: 어떤 것이 우리 사회의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십니까?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이유를 한 가지 골라주십시오.

표본 수: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190명

조사기간: 2023. 2. 20 ~ 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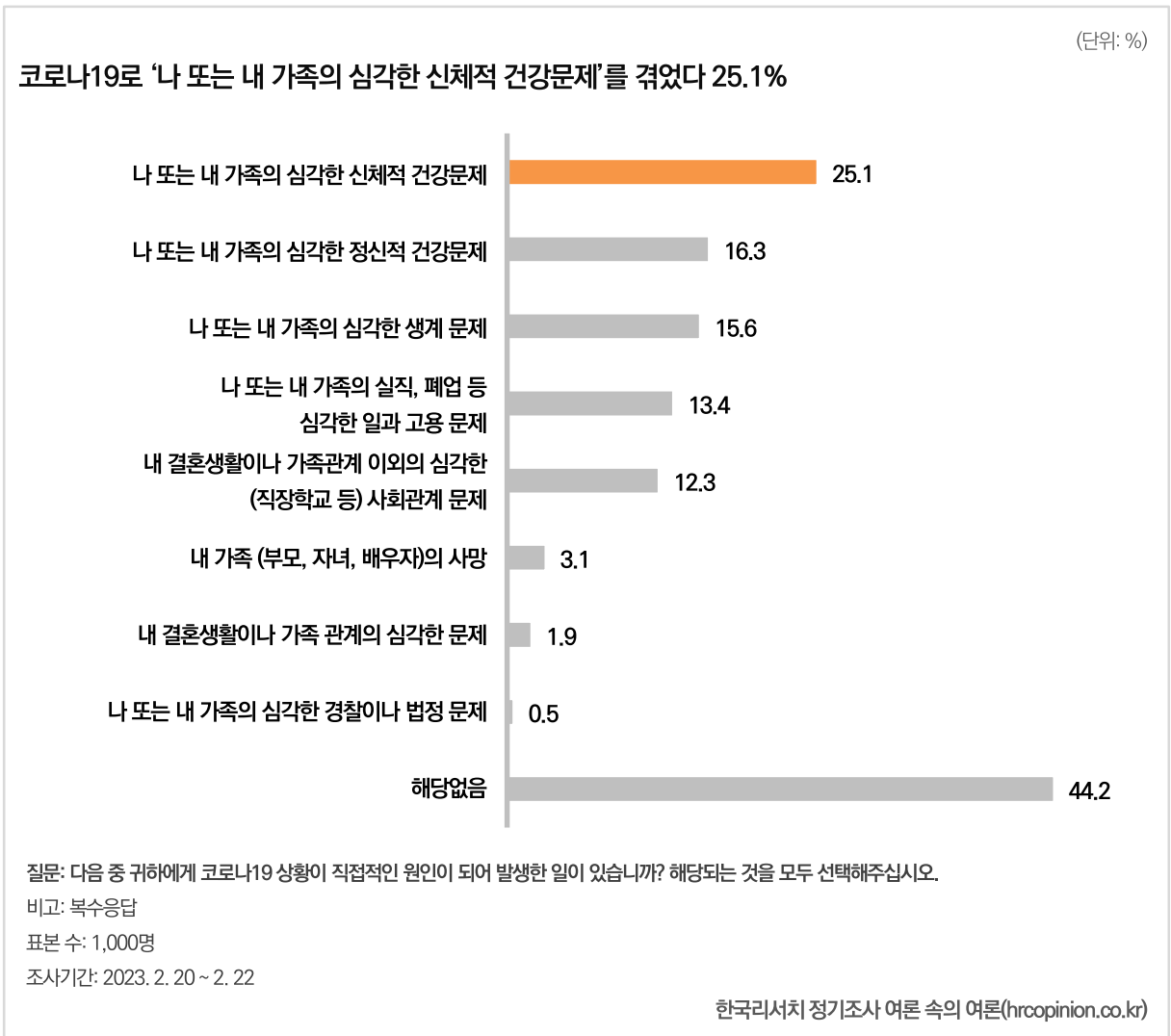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코로나19의 영향

네 명 중 한 명, 코로나19로 ‘나 또는 내 가족의 심각한 신체적 건강문제’ 겪어

전체 응답자의 25.1%가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나 또는 내 가족의 심각한 신체적 건강문제’를 겪었고, 16.3%는 ‘나 또는 내 가족의 심각한 정신적 건강문제’를 경험하였다. ‘나 또는 내 가족의 심각한 생계 문제(15.6%)’, ‘나 또는 내 가족의 실직, 폐업 등 심각한 일과 고용 문제(13.4%)’ 등 경제적 문제를 경험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또한 응답자의 12.3%는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심각한 사회관계 문제를 겪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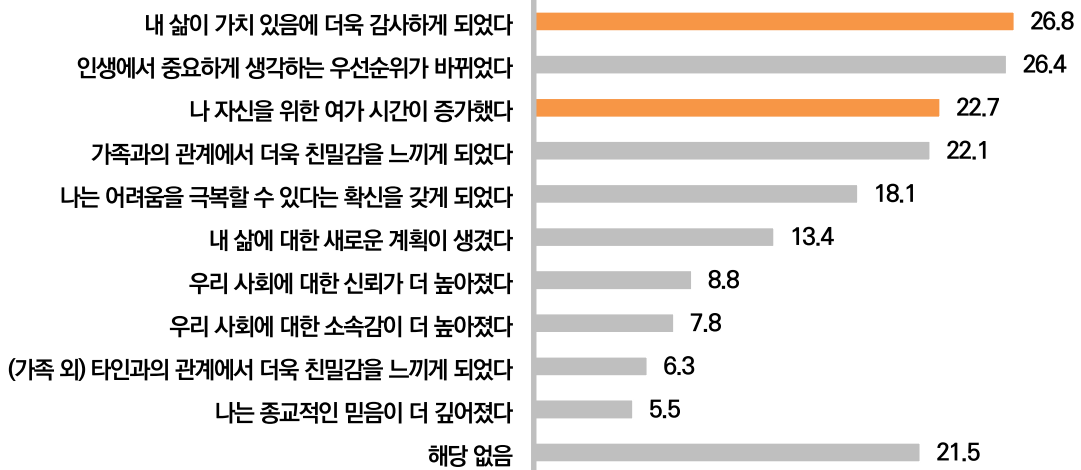
응답자 4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내 삶의 가치와 인생의 우선순위가 변해' 18-29세의 36.9%는 '나 자신을 위한 여가시간이 증가'

응답자 4명 중 1명은 코로나19로 인해 '내 삶이 가치 있음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다(26.8%)',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26.4%)'고 답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람도 22.1%였고, 18.1%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무형의 가치를 재발견했다는 비율도 높아졌다.

'나 자신을 위한 여가시간이 증가'한 사람은 전체의 22.7%인데, 특히 18-29세에서는 36.9%가 그렇다고 답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단위: %)

응답자 4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내 삶의 가치와 인생의 우선순위가 변해' 18-29세의 36.9%는 '나 자신을 위한 여가시간이 증가'



전체	사례수 (명)	내 삶이 가치 있음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다.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나 자신을 위한 여가 시간이 증가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생겼다.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졌다.	우리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더 높아졌다.	(가족 외)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종교적인 믿음이 더 깊어졌다.	해당 없음
전체	(1,000)	26.8	26.4	22.7	22.1	18.1	13.4	8.8	7.8	6.3	5.5	21.5
연령												
18-29세	(166)	15.1	19.0	36.9	8.1	7.9	12.3	3.1	3.6	6.6	2.8	30.9
30대	(151)	18.4	26.0	25.3	20.3	13.8	15.5	6.5	8.8	6.0	2.9	27.9
40대	(184)	24.3	27.9	22.6	20.1	15.9	14.1	8.2	4.0	5.2	3.6	26.6
50대	(194)	32.9	30.5	14.1	25.0	22.3	11.6	12.9	8.0	5.2	5.6	21.5
60세이상	(305)	34.9	27.0	19.1	30.1	24.3	13.7	10.8	11.8	7.8	9.4	10.2

질문: 코로나19에 의한 아래의 변화를 느끼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시해주시시오.

비고: 복수응답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2. 20 ~ 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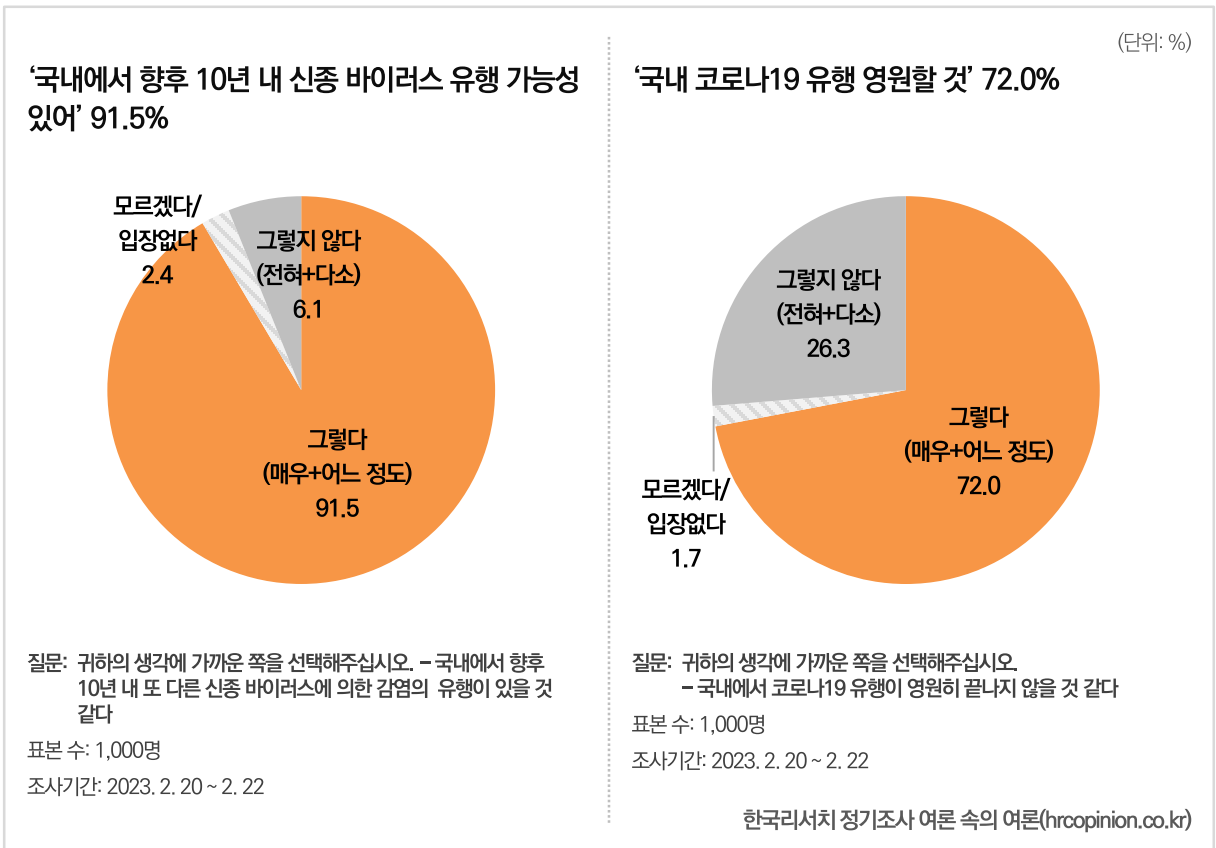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4. 코로나19 전망

‘국내에서 향후 10년 내 신종 바이러스 유행 가능성 있어’ 91.5%
‘국내 코로나19 유행 영원할 것’ 72.0%

응답자 10명 중 9명(91.5%)은 ‘국내에서 향후 10년 내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유행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역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역시 72.0%로 과반을 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 않고 일상회복도 상당부분 진행되었다는 평가의 기저에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아니라 ‘코로나19의 풍토병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는 이미 일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뿐 아니라 향후 10년 내 신종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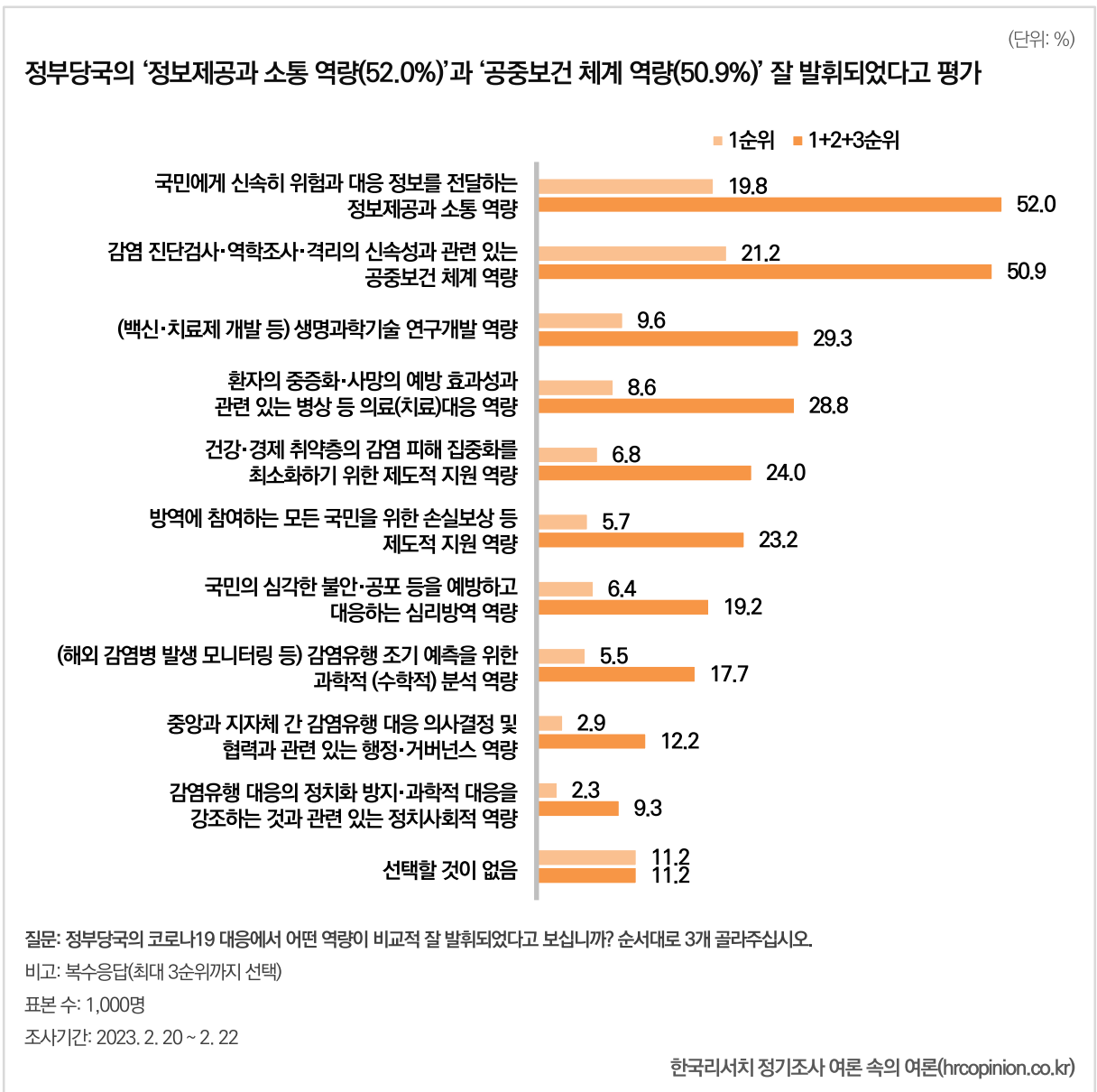


5

정부당국의 신종감염병 유행 대비와 대응 역량

정부당국의 '정보제공과 소통 역량(52.0%)'과 '공중보건 체계 역량(50.9%)'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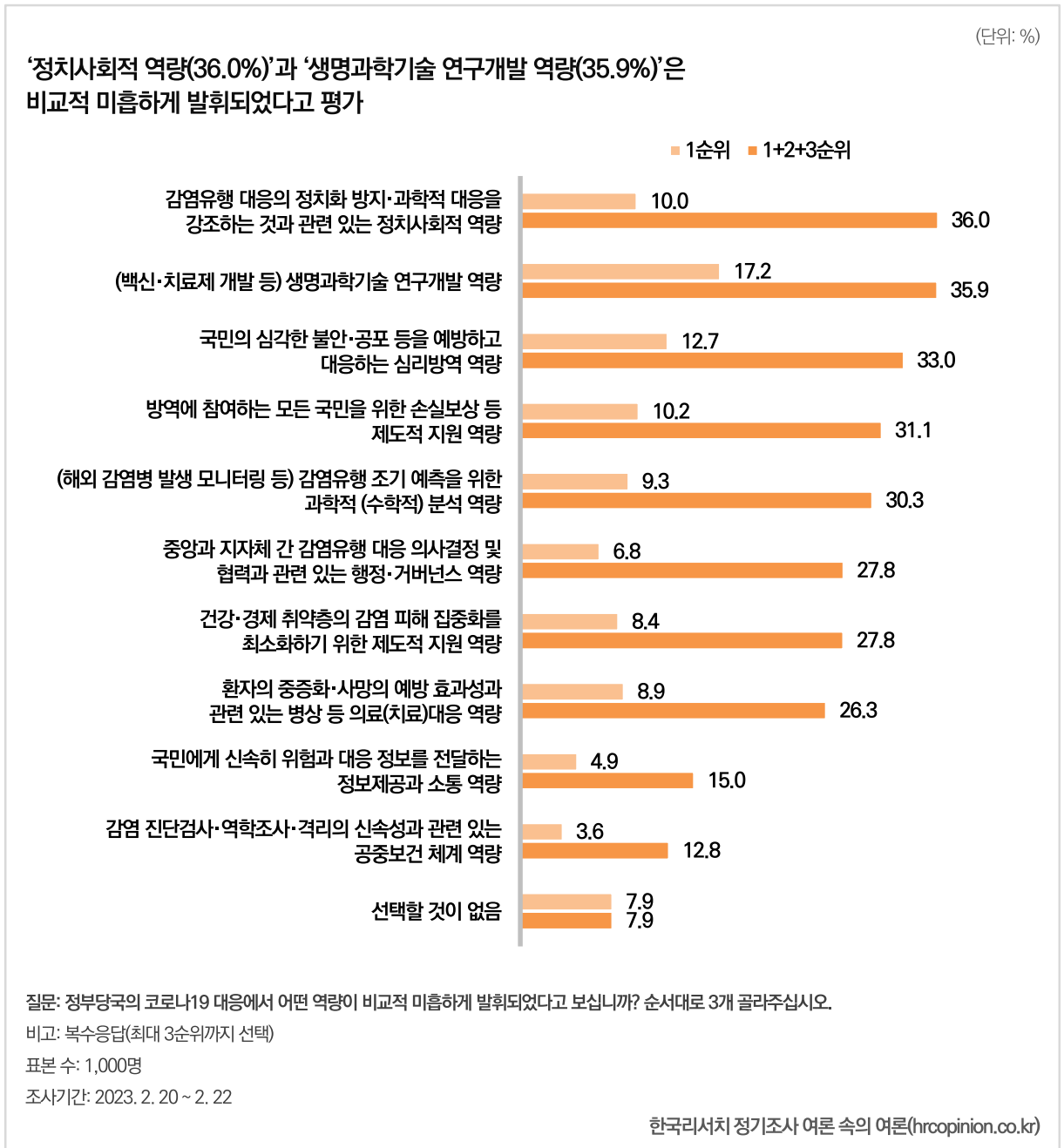
응답자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당국이 '국민에게 신속히 위험과 대응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제공과 소통 역량(1+2+3순위, 52.0%)', '감염 진단검사·역학조사·격리의 신속성과 관련 있는 공중보건 체계 역량(50.9%)'을 잘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백신·치료제 개발 등)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29.3%)', '환자의 중증화·사망의 예방 효과성과 관련 있는 병상 등 의료(치료)대응 역량(28.8%)' 등이 코로나19 대응에서 비교적 잘 발휘된 역량으로 언급되었다.



‘정치사회적 역량(36.0%)’과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35.9%)’은 비교적 미흡

반면 응답자 3명 중 1명은 ‘감염유행 대응의 정치화 방지·과학적 대응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 있는 정치사회적 역량(36.0%)’, ‘(백신·치료제 개발 등)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35.9%)’, ‘국민의 심각한 불안·공포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심리방역 역량(33.0%)’ 발휘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방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손실보상 등 제도적 지원 역량(31.1%)’과 ‘(해외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등) 감염유행 조기 예측을 위한 과학적(수학적) 분석 역량(30.3%)’ 역시 30% 이상이 코로나19 대응에서 미흡하게 발휘된 역량이라고 답했다.

앞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한 ‘정보제공과 소통’, ‘공중보건 체계 역량’을 제외하면, 미흡한 역량이라는 응답이 25 ~ 35% 수준으로, 의견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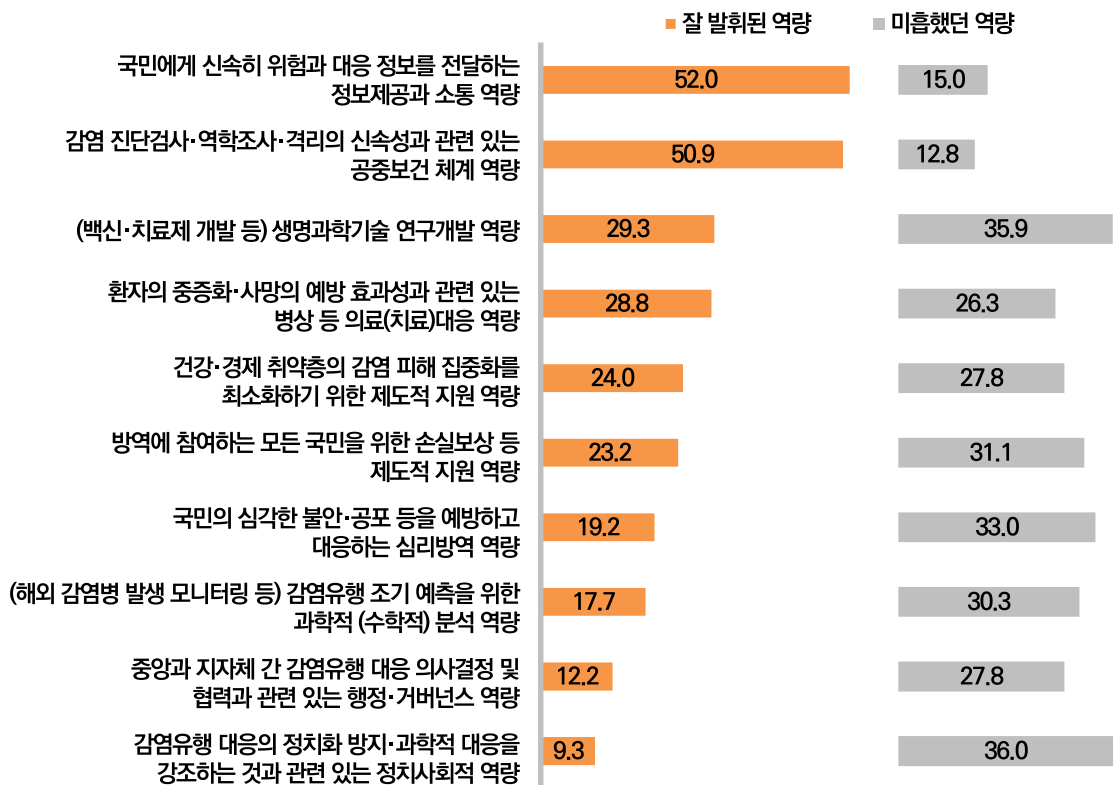


종합하자면, ‘국민에게 신속히 위험과 대응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제공과 소통 역량’과 ‘감염 진단검사·역학조사·격리의 신속성과 관련 있는 공중보건 체계 역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반면 ‘감염유행 대응의 정치화 방지·과학적 대응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 있는 정치사회적 역량’, ‘중앙과 지자체 간 감염유행 대응 의사결정 및 협력과 관련 있는 행정·거버넌스 역량’, ‘(해외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등) 감염유행 조기 예측을 위한 과학적 (수학적) 분석 역량’, ‘국민의 심각한 불안·공포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심리방역 역량’, ‘방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손실보상 등 제도적 지원 역량’은 잘 발휘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미흡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조금 더 우세하였다.

‘(백신·치료제 개발 등)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였다.

(단위: %)

‘정보제공과 소통 역량’과 ‘공중보건 체계 역량’은 우수한 평가
‘정치사회적 역량(36.0%)’과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35.9%)’은 미흡한 평가



질문: 정부당국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어떤 역량이 비교적 잘 / 비교적 미흡하게 발휘되었다고 보십니까? 순서대로 3개 골라주십시오.

비고: 복수응답(각각 최대 3순위까지 선택)

표본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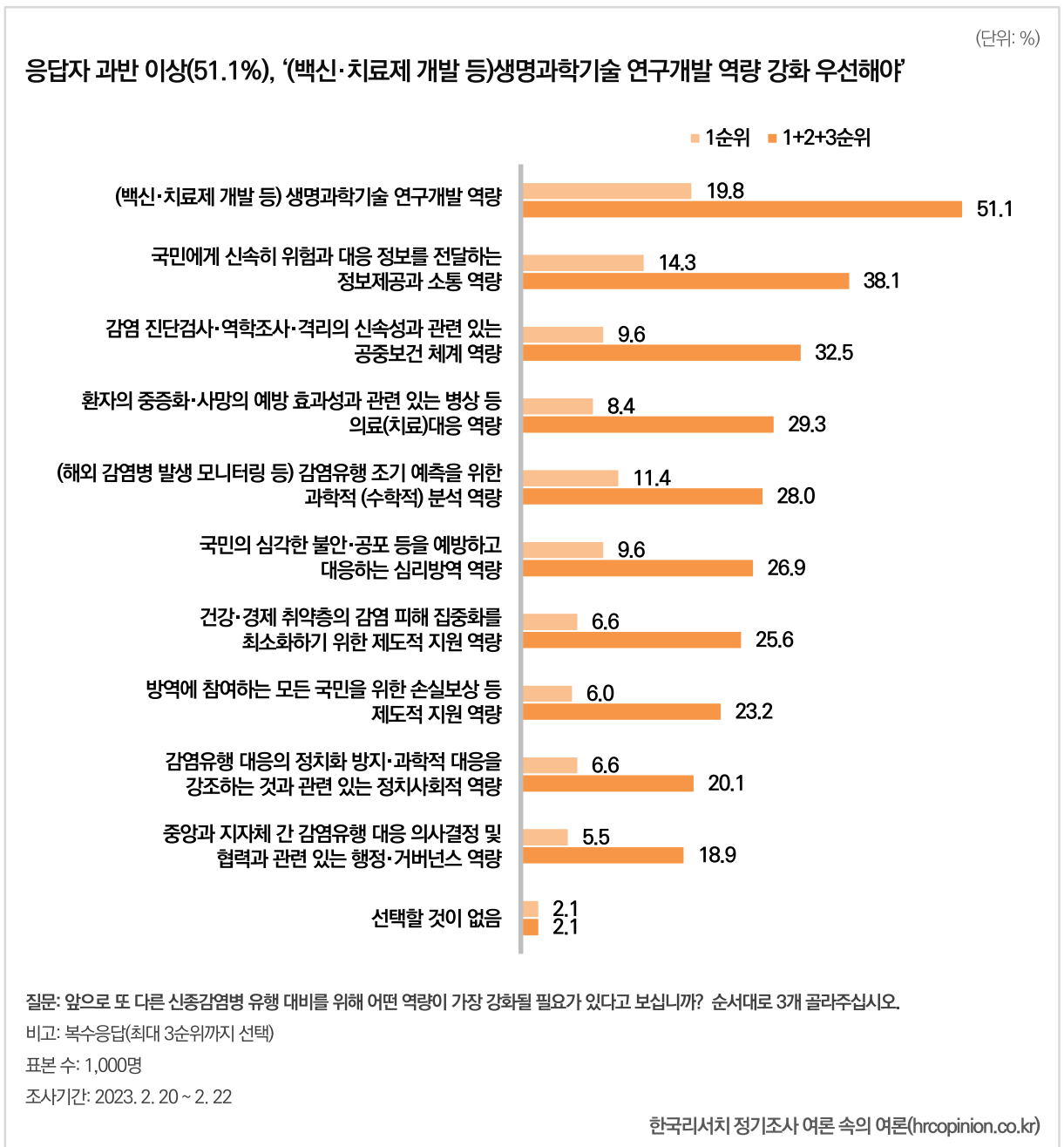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3. 2. 20 ~ 2. 2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응답자 절반 이상,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51.1%)' 강화 우선해야

응답자 2명 중 1명(1+2+3순위, 51.1%)은 신종감염병 유행 대비를 위해 '백신·치료제 개발 등'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앞서 35.9%가 미흡하게 발휘된 역량으로 평가를 한 만큼,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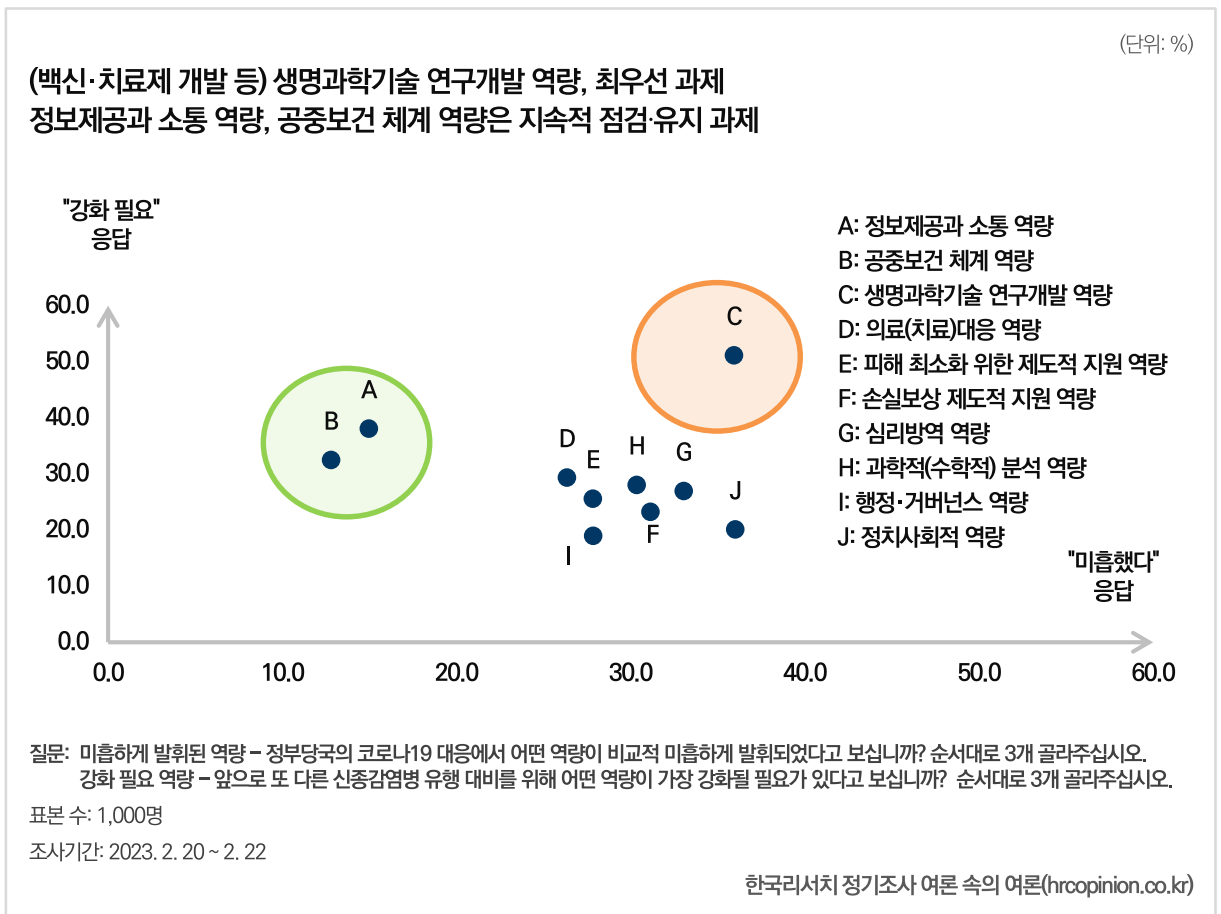
'국민에게 신속히 위험과 대응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제공과 소통 역량(38.1%)', '감염 진단검사·역학조사·격리의 신속성과 관련 있는 공중보건 체계 역량(32.5%)'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역량이기도 하나, 신종감염병 유행 대비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았다.



(백신·치료제 개발 등)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 최우선 과제 정보제공과 소통 역량, 공중보건 체계 역량은 지속적 점검·유지 과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미흡하게 발휘되었다’는 응답을 가로축으로, ‘신종감염병 유행을 대비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을 세로축으로 놓고 주요 역량을 평가해 보면, ‘(백신·치료제 개발 등)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은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 미흡하게 발휘되었다는 응답과 신종감염병 유행 대비를 위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 모두 다른 역량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당국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확인되었다.

‘국민에게 신속히 위험과 대응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제공과 소통 역량’과 ‘감염 진단검사·역학조사·격리의 신속성과 관련 있는 공중보건 체계 역량’은 미흡하게 발휘됐다는 응답은 낮지만 앞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높아, 꾸준히 점검·유지해 나가야 할 분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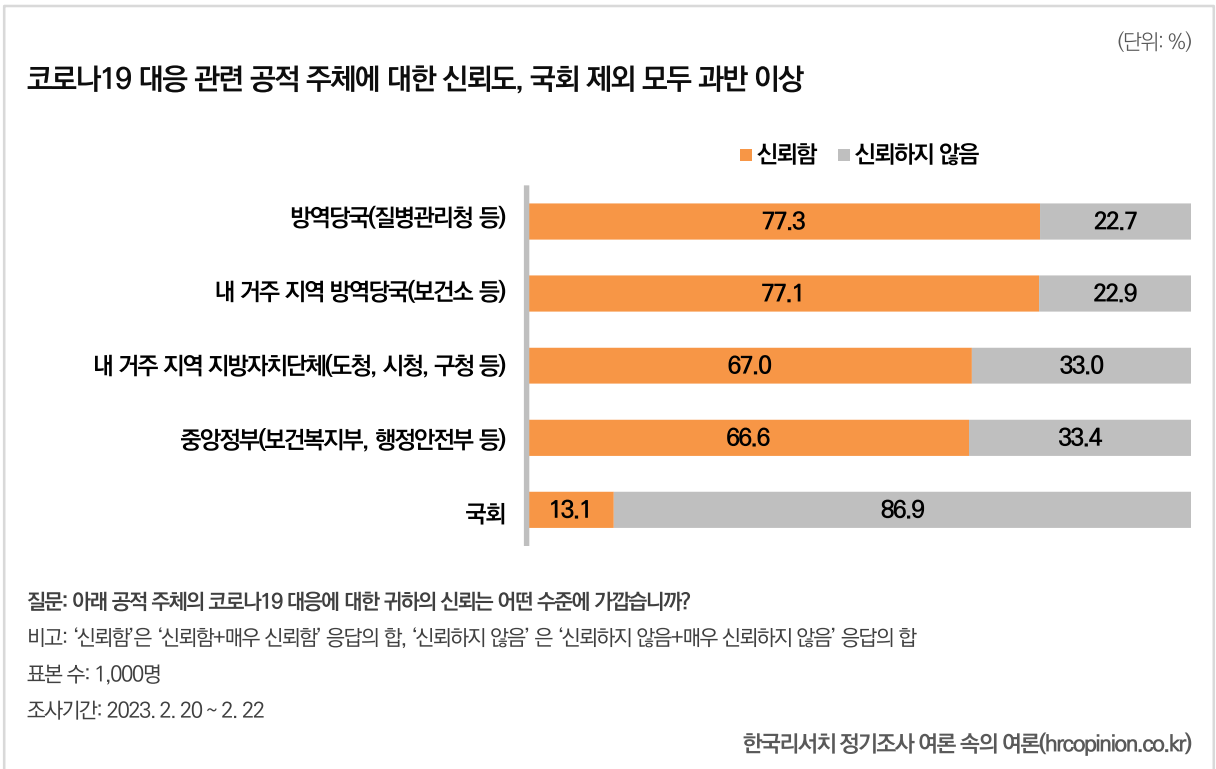
6

코로나19 대응 주체에 대한 신뢰

국회 제외, 공적 주체 신뢰도는 과반 이상 '방역당국(질병관리청 등)'과 '거주지 방역당국(보건소 등)' 신뢰도 가장 높아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77.3%)'과 '보건소 등 내 거주 지역 방역당국(77.1%)'의 코로나19 대응을 신뢰하였다. '도청, 시청, 구청 등 내 거주지 지방자치단체(67.0%)',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66.6%)'의 코로나19 대응 또한 다수가 신뢰하였다.

'국회(13.1%)'를 제외하고는 과반 이상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공적 주체를 신뢰한다고 답해, 방역과 관련해 행정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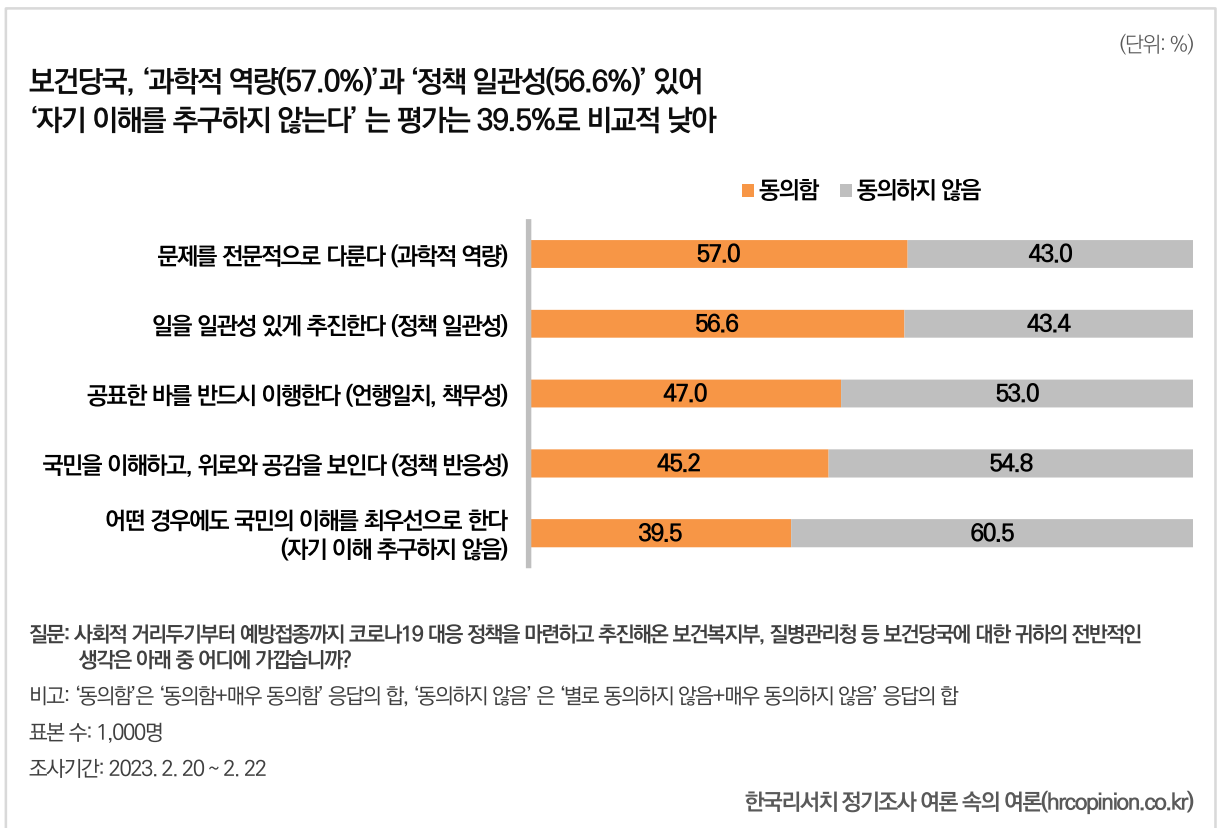


보건당국, '과학적 역량(57.0%)'과 '정책 일관성(56.6%)' 있어 '자기 이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평가는 39.5%로 비교적 낮아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방역당국(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의 '과학적 역량(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룸, 57.0%)'과 '정책 일관성(일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 56.6%)'에 동의하였다.

반면에 '책무성(공표한 바를 반드시 이행함, 비동의 53.0%, 동의 47.0%)'과 '정책 반응성(국민 이해 및 위로와 공감을 보임, 비동의 54.8%, 동의 45.2%)'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부정 평가가 각각 6.0%p와 9.6%p 더 높았다. '자기 이해 추구하지 않음(어떤 경우에도 국민 이해를 최우선으로 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5%로 과반을 넘음.

보건당국의 과학적 역량과 정책 일관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의적으로 평가를 했으나,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특히 국민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공공성에 대한 평가가 가장 부정적이라는 점은 보건당국이 새겨 들을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7

감염대응에서 기회의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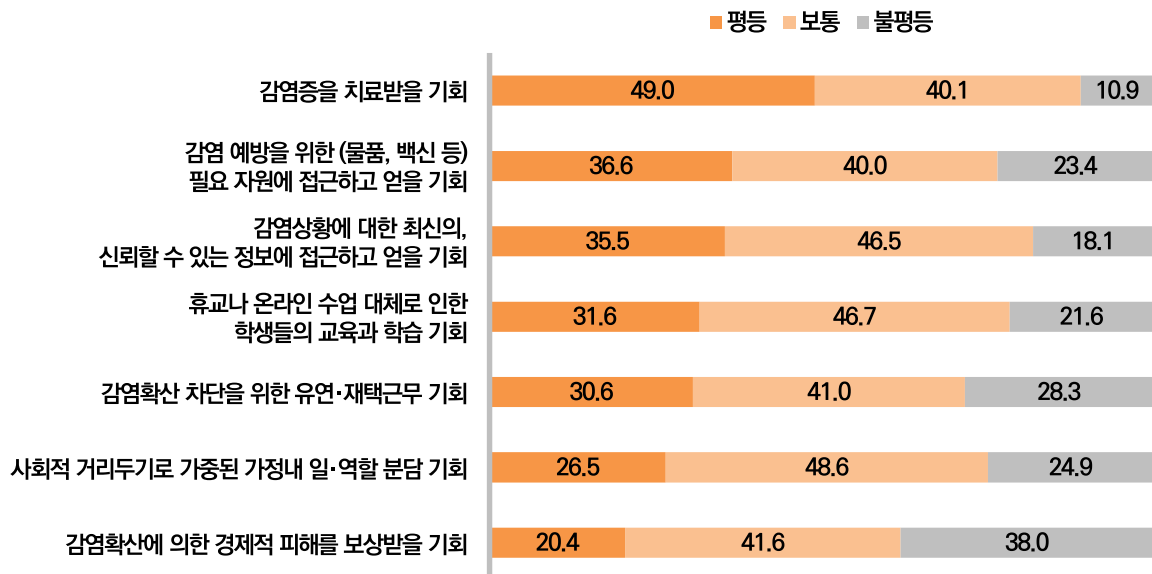
**‘감염증 치료 기회(49.0%)’ 가장 공정하고,
‘감염확산에 의한 경제적 피해 보상 기회(38.0%)’ 가장 불평등**

‘감염증을 치료받을 기회(49.0%)’가 공정하게 주어졌다는 응답이 주요 항목 중 가장 높았다. 이어서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 백신 등) 필요 자원에 접근하고 얻을 기회(36.6%)’, ‘감염상황에 대한 최신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하고 얻을 기회(35.5%)’, ‘휴교나 온라인 수업 대체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과 학습 기회(31.6%)’ 순으로 공정하게 주어졌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감염확산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기회(20.4%)’가 공정하게 주어졌다는 응답은 주요 항목 중 가장 낮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중된 가정내 일·역할 분담 기회(26.5%)’가 공정하게 주어졌다는 평가 또한 낮았다.

‘감염확산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기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평등’ 혹은 ‘불평등’ 항목보다 높았다.

(단위: %)

**‘감염증 치료 기회(49.0%)’ 평등했다는 평가 가장 많고
‘감염확산에 의한 경제적 피해 보상 기회(38.0%)’ 불평등했다는 평가 가장 높아**



질문: 코로나19 대응에서 아래 각 기회는 모든 국민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 ‘평등’은 ‘평등하다+매우 평등하다’ 응답의 합, ‘불평등’은 ‘불평등하다+매우 불평등하다’ 응답의 합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2. 20 ~ 2. 2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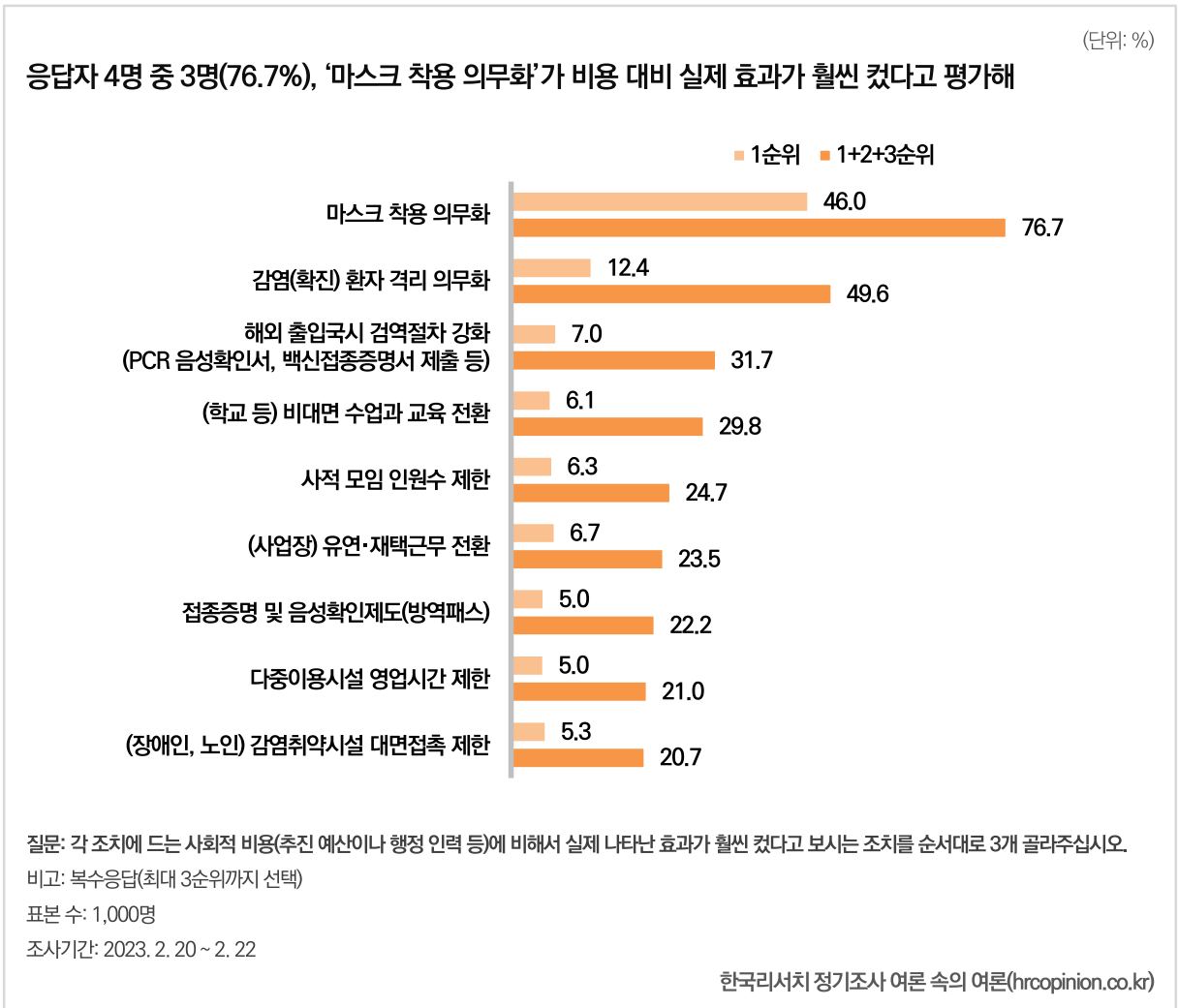
8

주관적 코로나19 조치 비용-효과성

응답자 4명 중 3명 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고 평가

코로나19 유행 시점에서 시행되었던 주요 조치들 가운데 비용 대비 효과가 컸던 방역 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1+2+3순위, 76.7%)'를 지목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감염(확진) 환자 격리 의무화(49.6%)', 'PCR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등 해외 출입국시 검역절차 강화(31.7%)' 순으로 많았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다른 주요 조치들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컸다는 평가가 크게 우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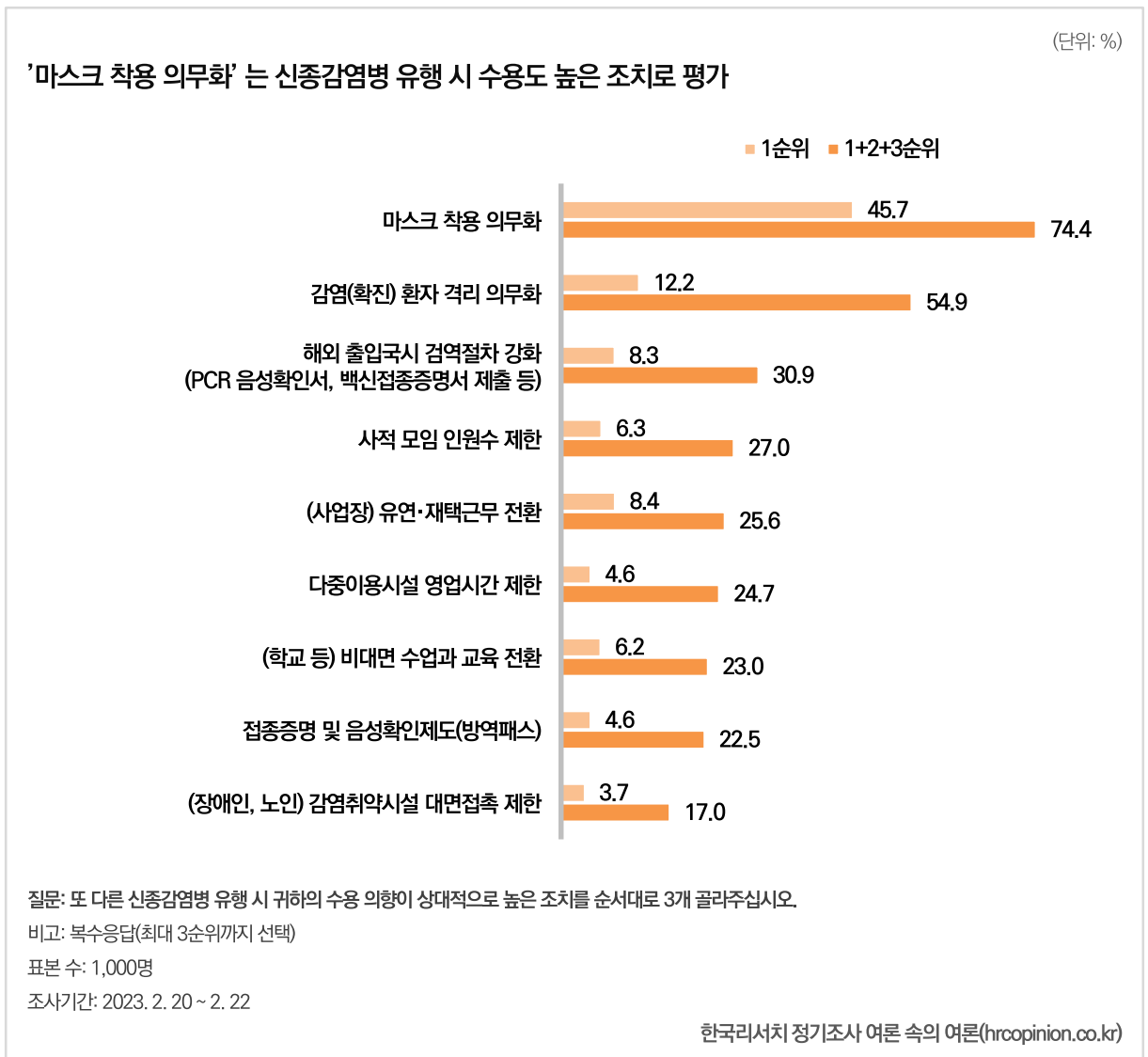
반면 '(장애인, 노인) 감염취약시설 대면접촉 제한(20.7%)',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21.0%)',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22.2%)' 등은 비용 대비 효과가 컸다는 응답이 20% 초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다른 신종감염병 유행 시 수용도 높은 조치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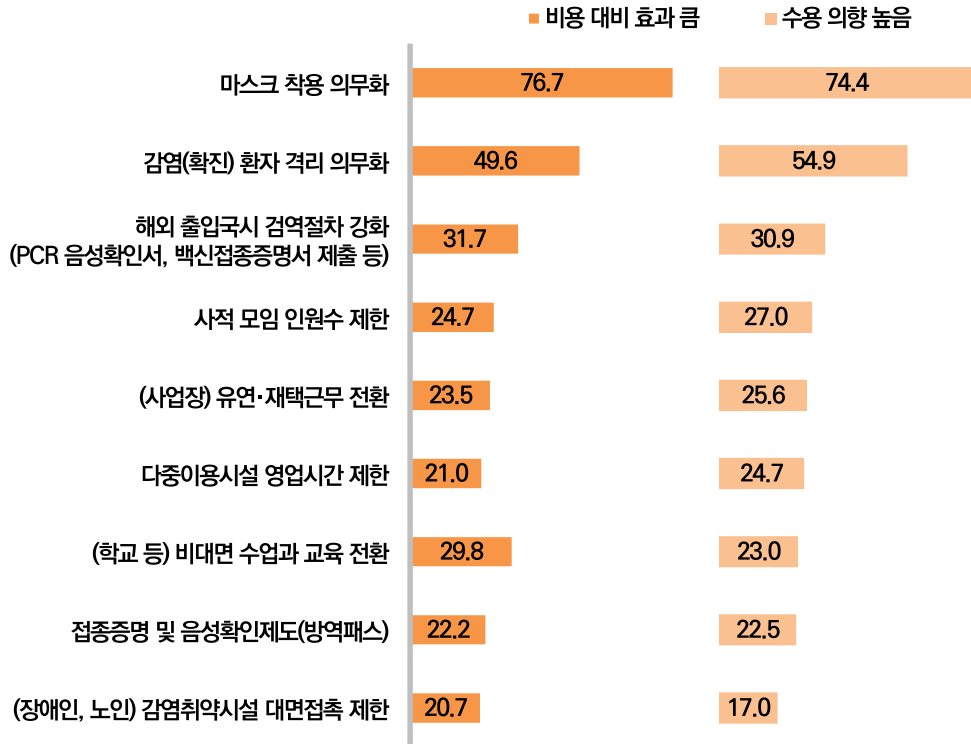
다른 신종감염병 유행 시, 수용도가 높은 방역 조치로는 앞서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조치와 비슷한 순서를 보였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74.4%)’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감염(확진) 환자 격리 의무화(54.9%)’, ‘PCR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등 해외 출입국시 검역절차 강화(30.9%)’ 순이었다.

‘(학교 등) 비대면 수업과 교육 전환(29.8%)’은 비용 대비 효과성은 주요 방역 조치들 중 4번째로 높았으나, 수용 의향에 대해서는 23.0%로 비교적 후순위였다. ‘(장애인, 노인) 감염취약시설 대면접촉 제한’ 조치는 효과(20.7%)나 수용 의향(17.0%) 모두 주요 방역 조치들 중 가장 낮았다.



(단위: %)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감염(확진) 환자 격리 의무화’는 비용 대비 효과도 크고 수용 의향도 높은 조치



질문: 비용 대비 효과 - 각 조치에 드는 사회적 비용(추진 예산이나 행정 인력 등)에 비해서 실제 나타난 효과가 훨씬 컸다고 보시는 조치를 순서대로 3개 골라주십시오.

수용도 - 또 다른 신종감염병 유행 시 귀하의 수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치를 순서대로 3개 골라주십시오.

비고: 복수응답(최대 3순위까지 선택)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2. 20 ~ 2. 2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9 코로나19 방역 참여 경험

코로나19 자가키트 사용 경험 있음 81.9%, 롱코비드 증상 경험 13.5% 등

코로나19 관련 경험을 크게 ‘감염’, ‘검사’, ‘치료’, ‘백신접종’, ‘지원’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경험 유무를 확인해 보았다.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 감염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1.6%이며, 롱코비드 증상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3.5%, 코로나19 재감염(재확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1.9%가 자가 코로나19 검사키트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코로나19 유전자증폭 검사(PCR 검사) 경험은 69.4%, 의료기관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경험은 54.4%였다. 코로나19 역학적 추적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1.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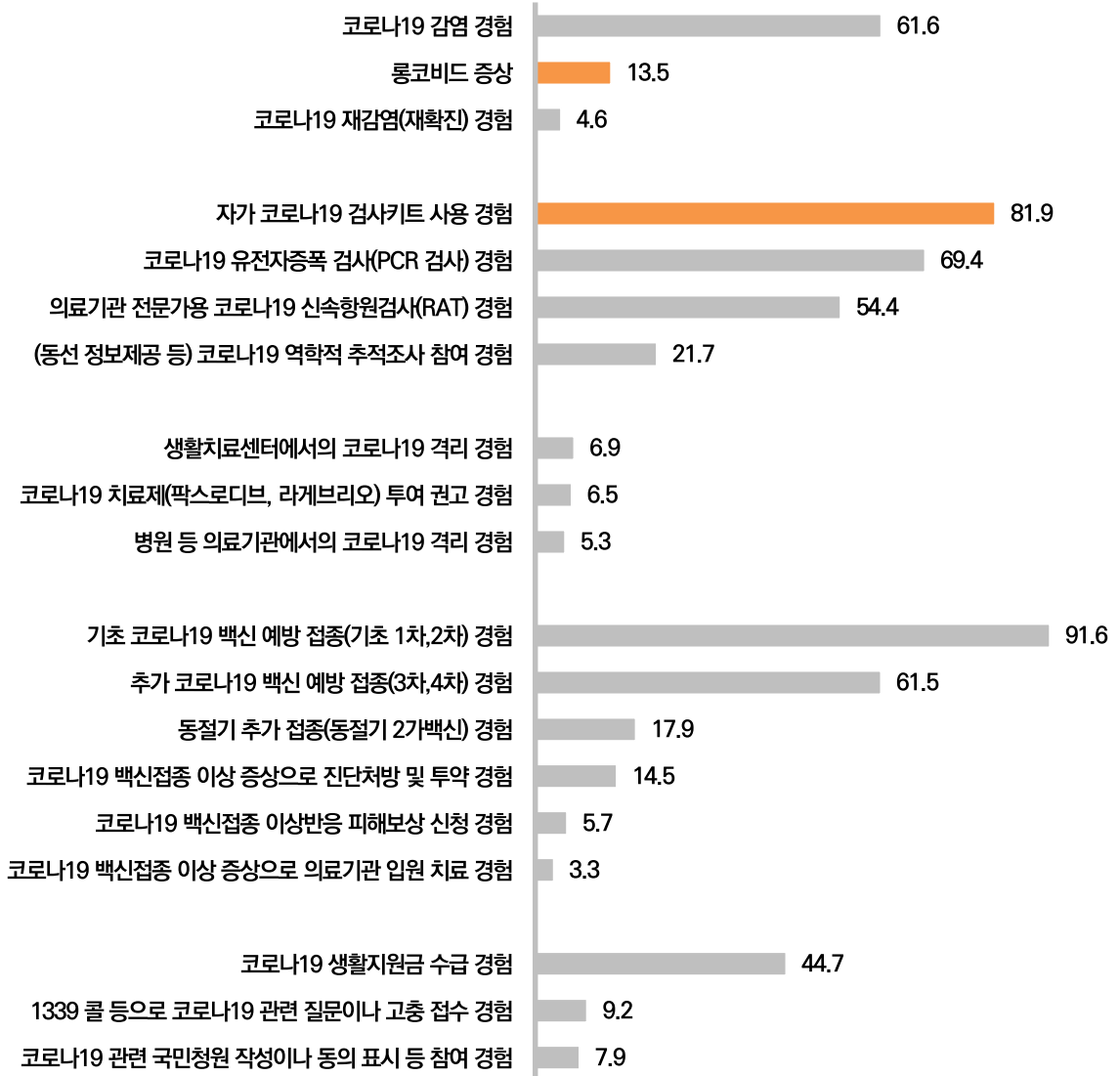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자택 외 외부에서 격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각각 6.9%(생활치료센터), 5.3%(병원 등 의료기관)이며, 코로나19 치료제 투여 권고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6.5%였다.

전체 응답자의 91.6%가 코로나19 1차 혹은 2차 접종 경험이 있으며, 61.5%는 3,4차 접종까지 마쳤다고 답했다. 반면 동절기 2가백신 접종률은 이보다 낮은 17.9%로 낮았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 증상으로 진단처방이나 투약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4.5%이며,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경험은 5.7%,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 증상으로 의료기관 입원 및 치료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3%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는 응답은 44.7%이며, 1339콜 등으로 코로나19 관련 질문이나 고충 접수를 했다는 응답은 9.2%, 코로나19 관련 국민청원 작성이나 동의 표시 등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9%였다.

(단위: %)

코로나19 관련 경험 유무



질문: 각각에 대해 귀하의 경험 여부를 선택해주시시오.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2. 20 ~ 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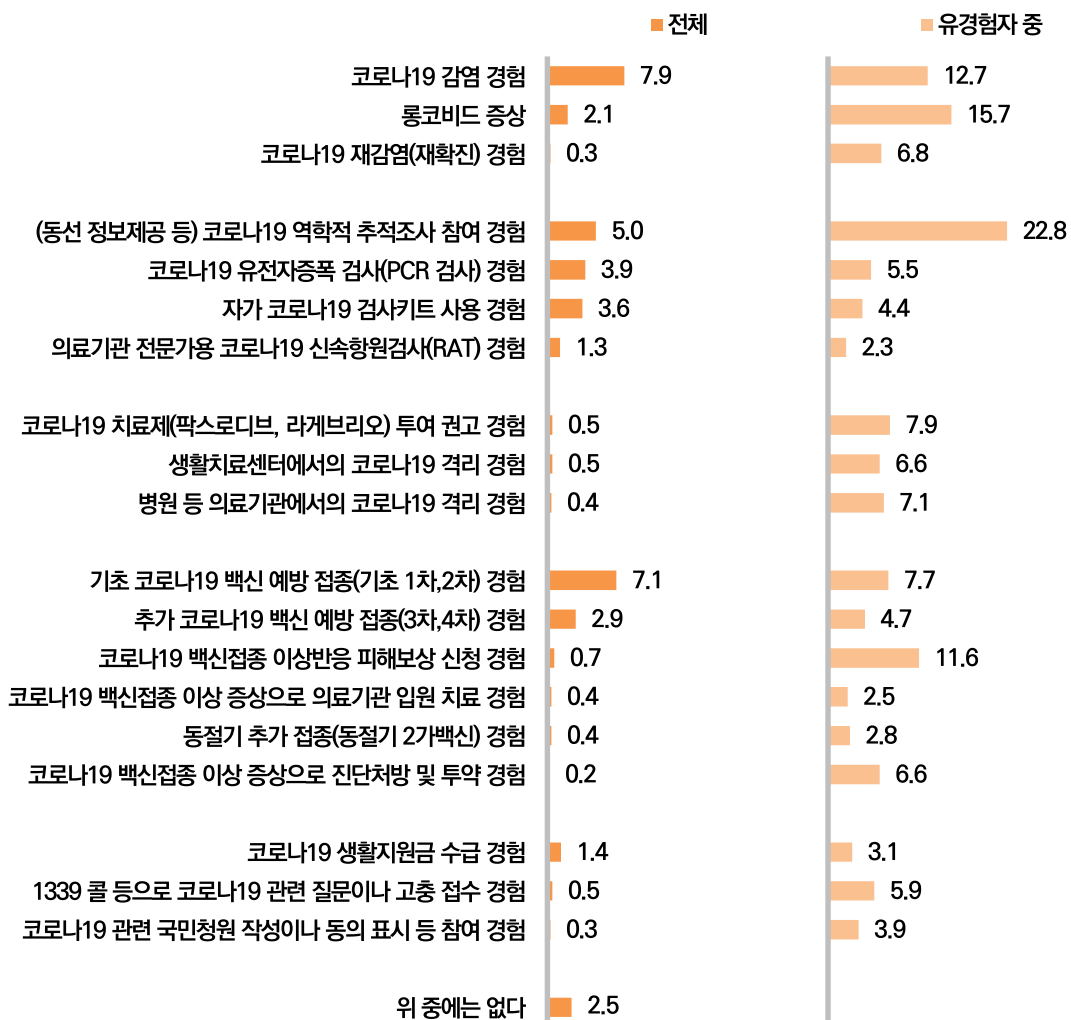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코로나19 역학적 추적조사’ 경험자 중 22.8%, 경험 과정에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자유 침해 있었다고 답해

코로나19 관련 주요 경험 중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자유에 침해가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는 ‘(동선 정보제공 등) 코로나19 역학적 추적조사 참여 경험(경험자 중 22.8%)’, ‘롱코비드 증상(15.7%)’, ‘코로나19 감염 경험(12.7%)’,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경험(11.6%)’ 등이 비교적 높았다. 전체 국민 기준으로는 ‘코로나19 감염 경험(7.9%)’, ‘코로나19 백신 1차, 2차 접종 경험(7.1%)’이 비교적 높았다.

(단위: %)

‘코로나19 역학적 추적조사’ 경험자 중 22.8%, 경험 과정에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자유 침해 있었다고 답해



※ 침해가 있었던 적 없다 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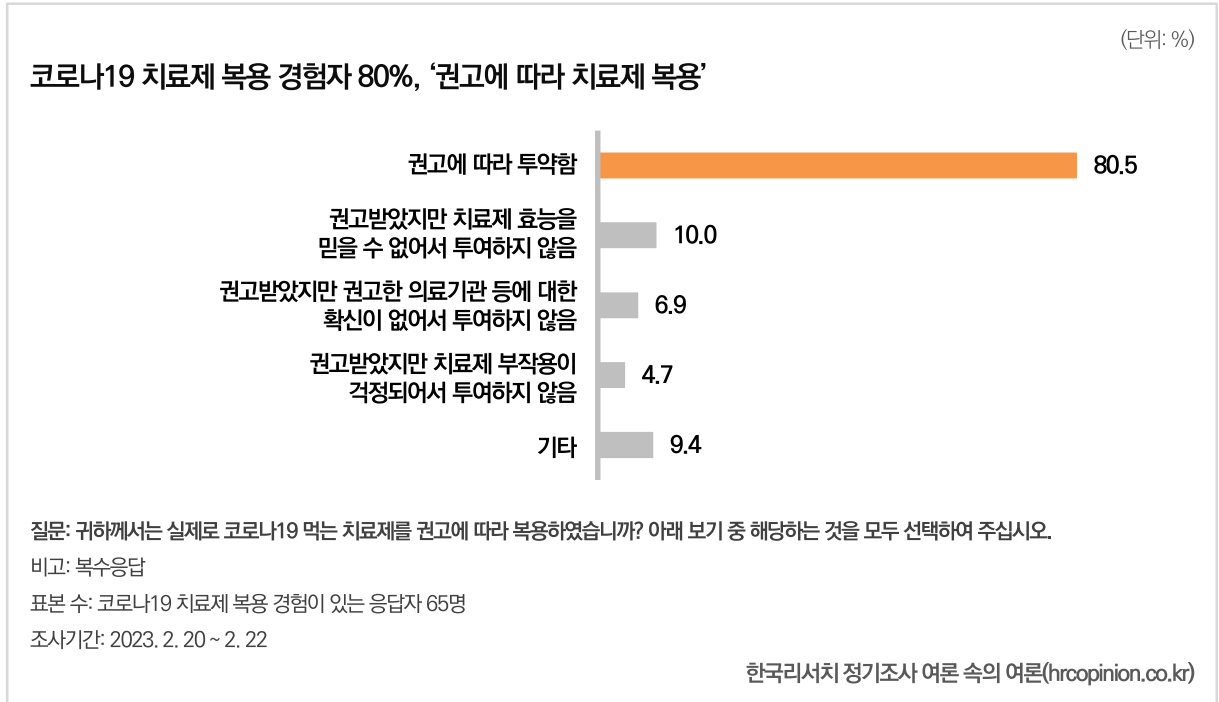
질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신 것 중 인간의 존엄함이나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자유에 침해가 있었다고 보시는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표본 수: 코로나19 관련 경험이 하나라도 있는 응답자 990명

조사기간: 2023. 2. 20 ~ 2. 22

코로나19 치료제 복용 경험자 80.5%, ‘권고에 따라 치료제 복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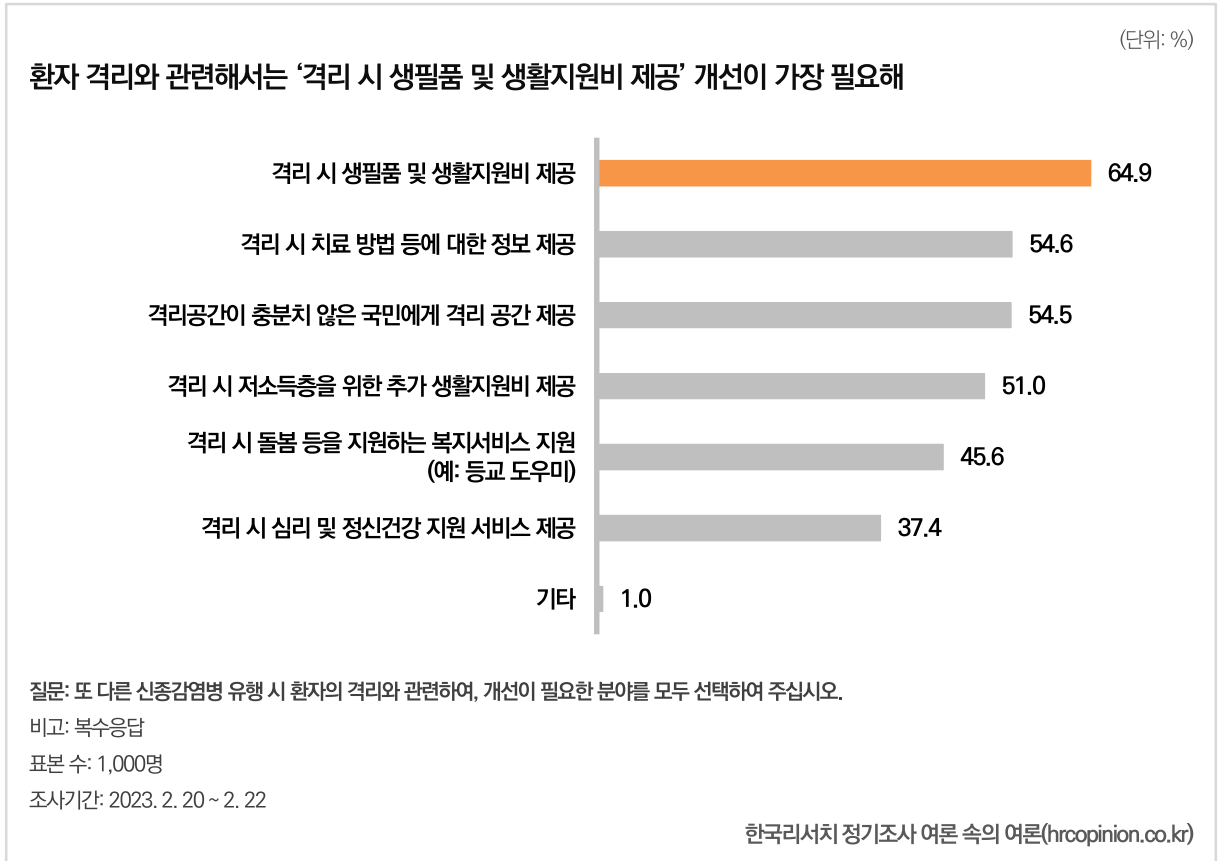
코로나19 치료제 복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80.5%는 ‘권고에 따라 치료제를 투약’했으며, 치료제 복용 경험자 10명 중 1명(10.0%)은 ‘권고받았지만 치료제 효능을 믿을 수 없어 투여하지 않았다’고 답함



환자 격리와 관련해서는 ‘격리 시 생필품 및 생활지원비 제공’ 개선이 가장 필요해

또 다른 신종감염병 유행 시, 환자 격리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격리 시 생필품 및 생활지원비 제공’을 지목한 사람이 64.9%로 가장 많았다. ‘격리 시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54.6%)’, ‘격리공간이 충분치 않은 국민에게 격리 공간 제공(54.5%)’, ‘격리 시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생활지원비 제공(51.0%)’ 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도 절반을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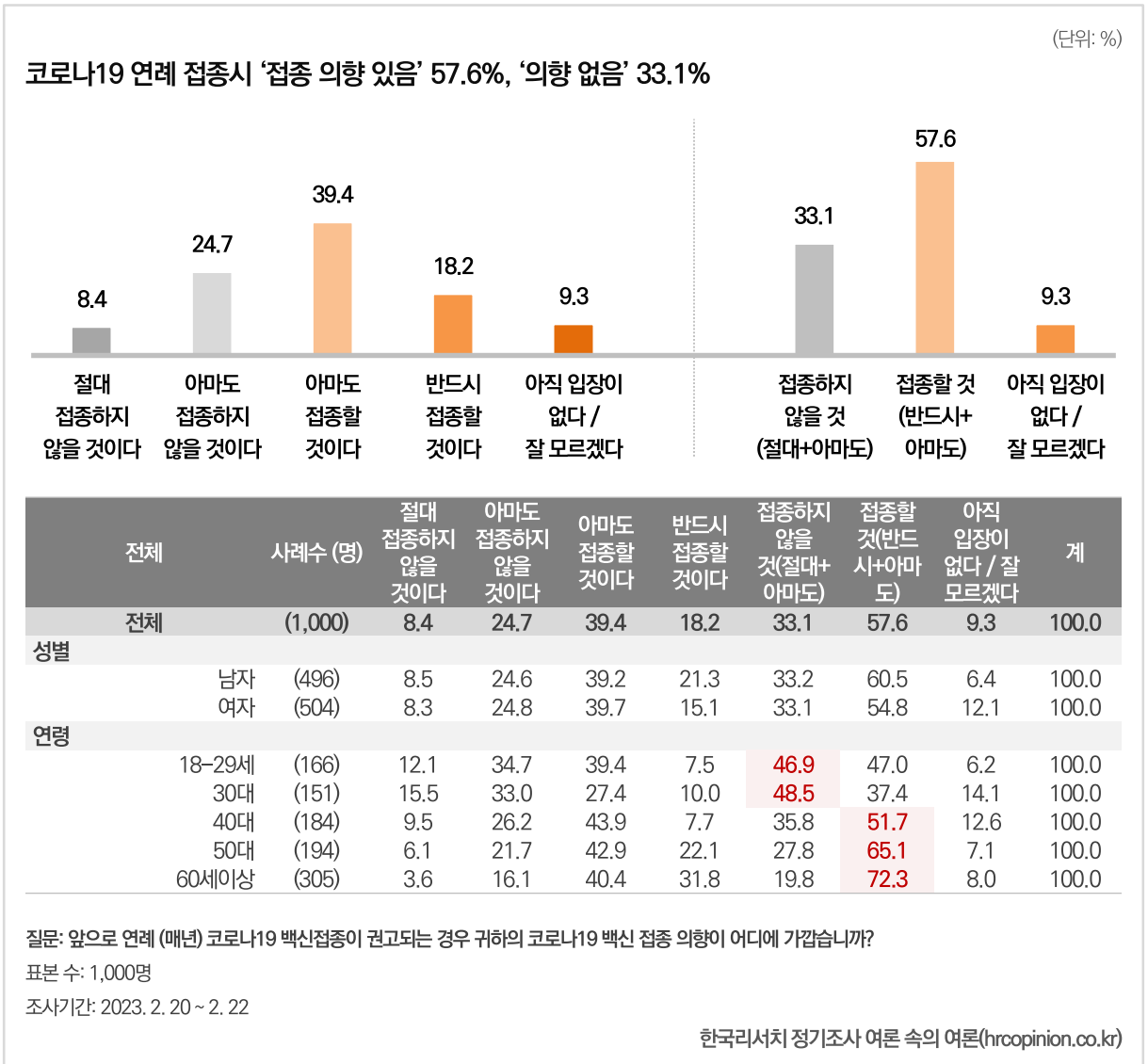
반면 ‘심리 및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37.4%로 가장 적었다.



10 코로나19와 백신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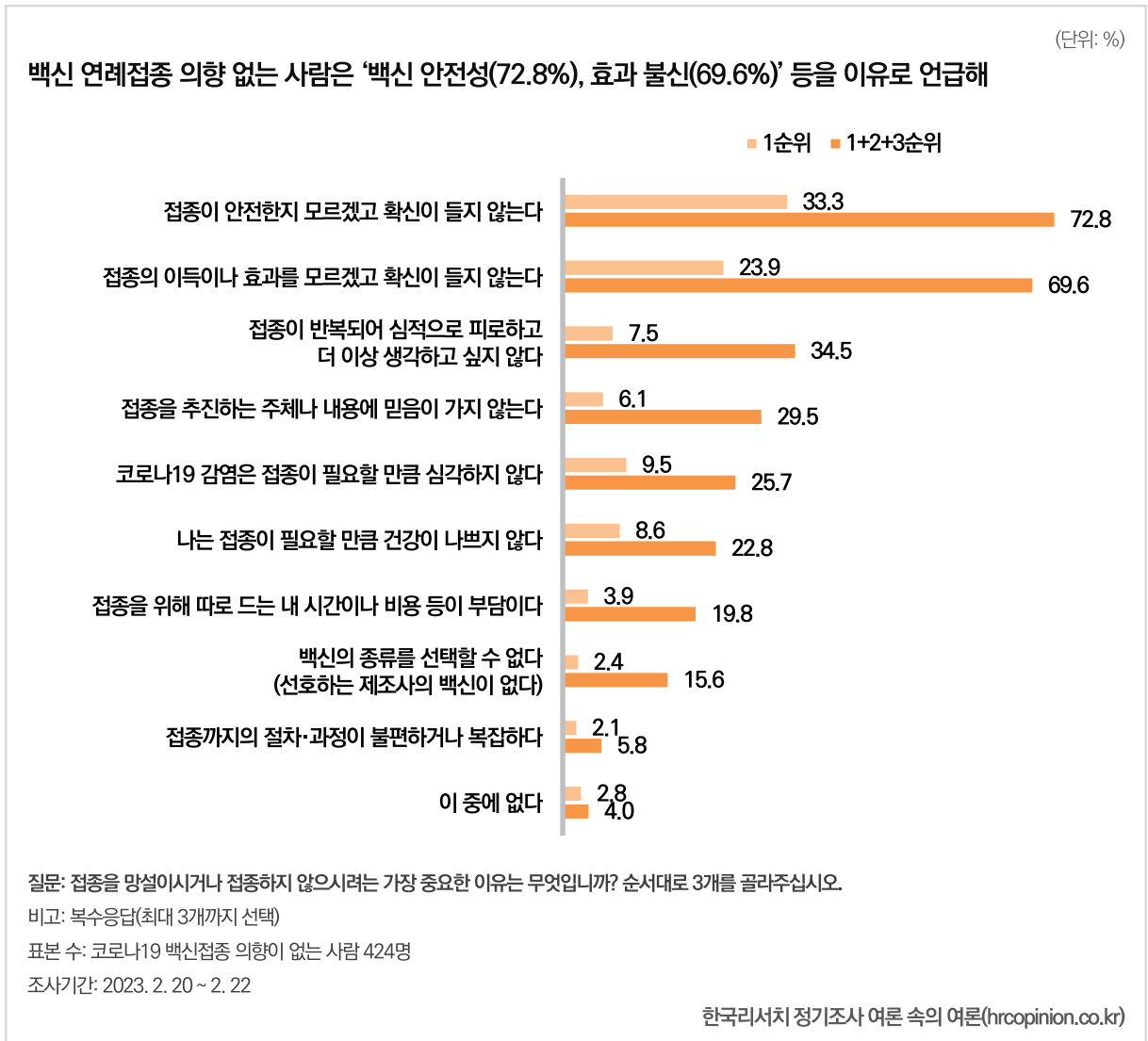
코로나19 연례 접종시 '접종 의향 있음' 57.6%, '의향 없음' 33.1% '백신 안전성(72.8%), 효과 불신(69.6%)'으로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앞으로 매년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권고하는 경우, 응답자의 57.6%는 접종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반드시 접종할 것 18.2%, 아마도 접종할 것 39.4%).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3.1%(절대 접종하지 않을 것 8.4%, 아마도 접종하지 않을 것 24.7%), 아직 입장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9.3%였다. 30대 이하에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에 육박한 반면(18-29세 46.9%, 30대 48.5%), 40대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답했다(40대 51.7%, 50대 65.1%, 60세 이상 72.3%).



코로나19 연례 접종 의향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 10명 중 7명은 미접종 이유로 '접종이 안전한지 모르겠고 확신이 들지 않음(72.8%)', '접종의 이득이나 효과를 모르겠고 확신이 들지 않음(69.6%)' 등을 꼽았다. 백신 자체의 안전성과 효과를 불신하는 태도가 접종 의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접종이 반복되어 심적으로 피로하고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34.5%)', '접종을 추진하는 주체나 내용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29.5%)'와 같이 피로감과 접종 추진 주체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언급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공공의 이익,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 접종 필요해, 7-80%대 다만, ‘접종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해

응답자 10명 중 7-8명은 공공의 이익과 집단 면역 형식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할 수 있다면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응답자의 85.3%는 ‘감염 유행으로부터 취약층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이 더 큰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에게 접종증명·검사음성확인서 등의 요구를 검토하거나 도입’할 수 있고, 79.8%는 ‘나와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 형성은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 수단이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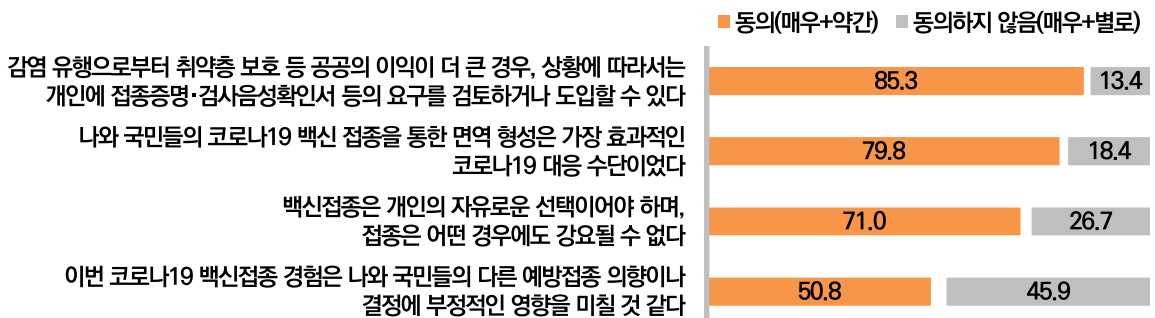
그러나 ‘백신접종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하며, ‘접종은 어떤 경우에도 강요될 수 없다(71.0%)’는 데에도 다수가 공감하였다. 공공을 보호하고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율성 역시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인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백신접종 경험은 나와 국민들의 다른 예방접종 의향이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에 동의하는 응답은 50.8%, 동의하지 않는 응답은 45.9%로 큰 차이는 없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나와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 형성은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 수단이었다’는 데 공감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번 코로나19 백신접종 경험은 나와 국민들의 다른 예방접종 의향이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데 공감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단위: %)

‘공공의 이익,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 접종 필요해, 7-80%대 다만, ‘접종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해



연령	전체 (1,000)	감염 유행으로부터 취약층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이 더 큰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에게 접종증명·검사음성확인서 등의 요구를 검토하거나 도입할 수 있다.	나와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 형성은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 수단이었다.	백신접종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하며, 접종은 어떤 경우에도 강요될 수 없다.	이번 코로나19 백신접종 경험은 나와 국민들의 다른 예방접종 의향이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전체	(1,000)	85.3	79.8	71.0	50.8
18-29세	(166)	85.0	67.8	77.6	59.8
30대	(151)	80.8	72.3	73.1	52.3
40대	(184)	83.9	74.0	71.8	51.7
50대	(194)	87.1	83.5	74.2	49.4
60세이상	(305)	87.5	91.1	63.8	45.4

질문: 귀하께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 진술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본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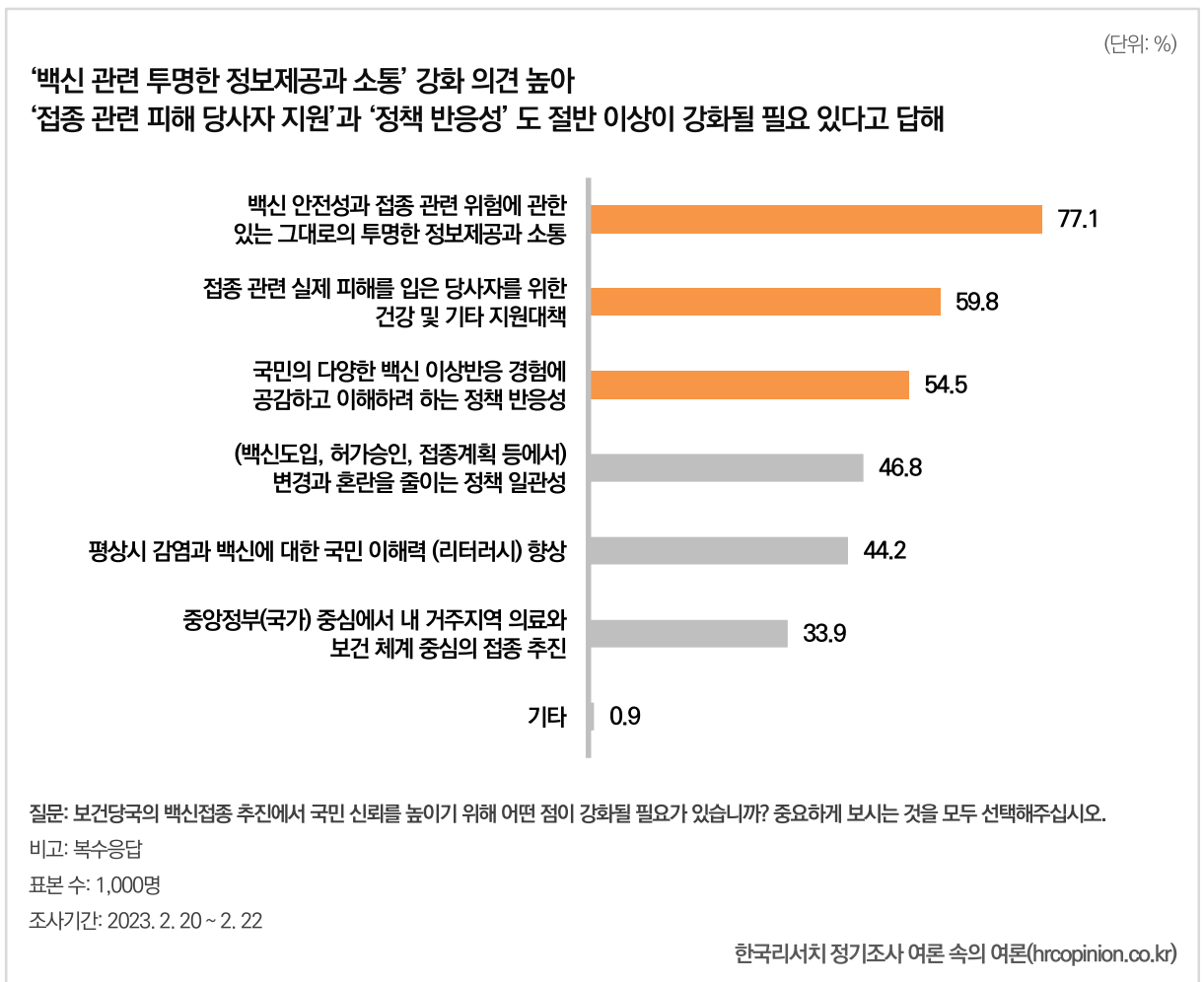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3. 2. 20 ~ 2. 2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백신 접종 관련 신뢰 향상을 위해, ‘백신 관련 투명한 정보제공과 소통’ 강화해야 응답자 절반 이상, ‘접종 관련 피해 당사자 지원’과 ‘정책 반응성’ 강화도 중요

보건당국이 백신접종 추진 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백신 안전성과 접종 관련 위험에 관한 있는 그대로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7.1%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절반 이상이 ‘접종 관련 실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위한 건강 및 기타 지원대책(59.8%)’, ‘국민의 다양한 백신 이상반응 경험에 공감하고 이해하려 하는 정책 반응성(54.5%)’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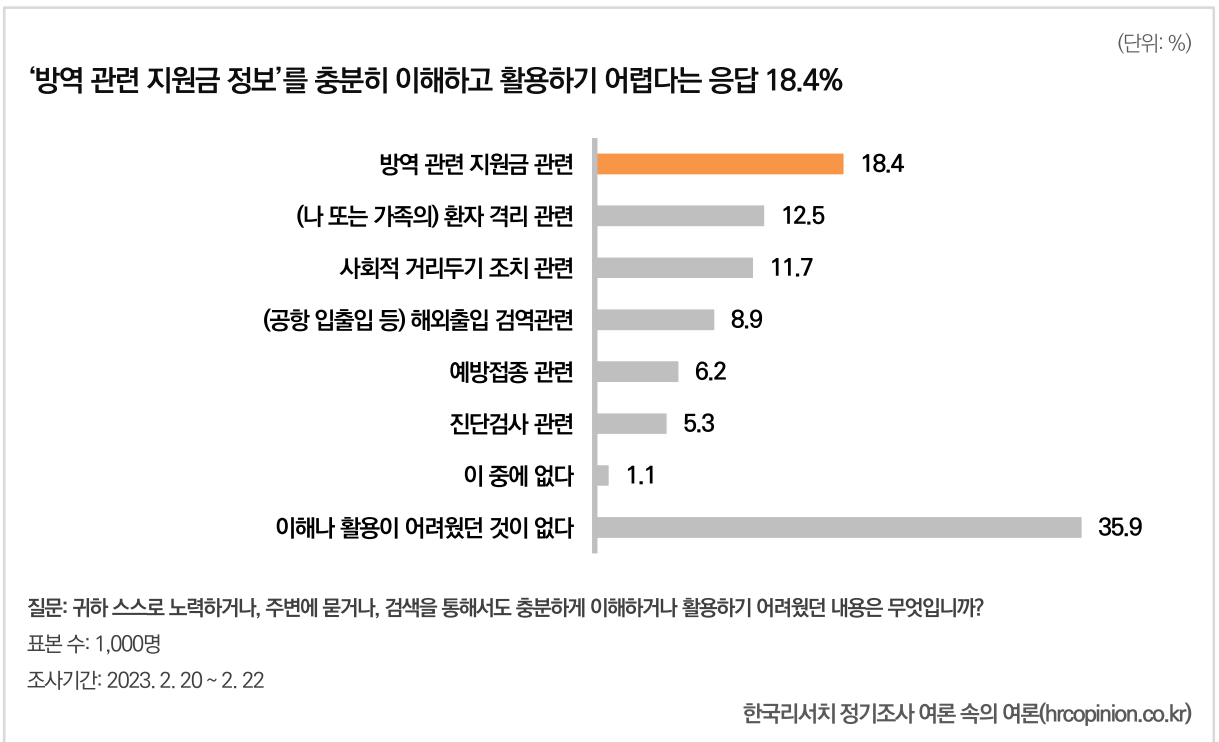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제 피해 당사자에게 그에 맞는 지원대책이 이뤄진다면 백신 접종에 관한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백신도입, 허가승인, 접종계획 등에서) 변경과 혼란을 줄이는 정책 일관성(46.8%)’, ‘평상시 감염과 백신에 대한 국민 이해력 (리터러시) 향상(44.2%)’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11 코로나19 정보안내와 지침

‘이해나 활용이 어려웠던 정보 없었다’ 35.9%
‘방역 관련 지원금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응답 가장 높아

코로나19 관련하여, 스스로 노력하거나, 주변에 묻거나, 검색을 통해서도 이해나 활용이 어려웠던 정보로는 ‘방역 관련 지원금 관련(18.4%) 정보’를 지목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나 또는 가족의) 환자 격리 관련 정보(12.5%)’,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관련 정보(11.7%)’ 등의 순이었다. 3명 중 1명 이상(35.9%)은 이해하거나 활용하는 데 어려웠던 정보는 특별히 없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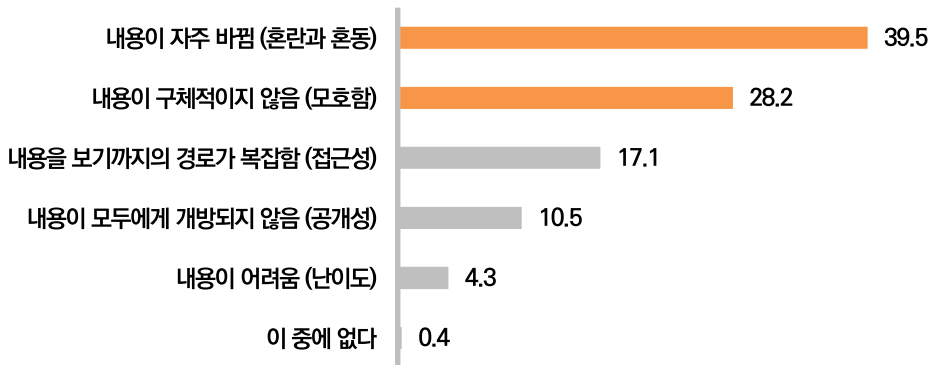


코로나19 관련 이해 및 활용이 어려운 적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 10명 중 4명(39.5%)은 '내용이 자주 바뀌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되었던 주요 조치들에서 혼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모호함, 28.2%)', '내용을 보기까지의 경로가 복잡함(접근성, 17.1%)' 등도 주요 이유로 언급되었다.

모든 정보에 있어 '찾은 내용 변동'이 정보 이해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인 가운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정보 이해나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 중 절반 이상(51.2%)이 '찾은 내용 변동'을 이유로 지목하였다. '환자 격리'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내용의 모호함(34.1%)'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다른 정보 영역 대비 비교적 높았다.

(단위: %)

내용이 자주 바뀌고, 모호하다는 점을 정보 이해와 활용 어려운 이유로 답해



코로나19 관련 이해 및 활용이 어려운 적 있었던 응답자	사례수 (명)	내용이 자주 바뀜 (혼란과 혼동)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모호함)	내용을 보기까지의 경로가 복잡함 (접근성)	내용이 모두에게 개방되지 않음 (공개성)	내용이 어려움 (난이도)	이 중에 없다	계
전체	(641)	39.5	28.2	17.1	10.5	4.3	0.4	100.0
방역 관련 지원금	(184)	35.3	28.7	15.9	14.9	5.3	0.0	100.0
(나 또는 가족의) 환자 격리	(125)	45.8	34.1	14.3	4.8	1.0	0.0	100.0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117)	51.2	27.6	14.7	6.0	0.6	0.0	100.0
(공항 입출입 등) 해외출입 검역	(89)	33.7	26.9	22.1	8.8	7.7	0.9	100.0
예방접종	(62)	37.1	27.2	16.3	15.9	3.4	0.0	100.0
진단검사	(53)	32.2	19.4	23.4	11.5	13.5	0.0	100.0
이 중에 없음	(11)	9.1	17.6	27.8	28.8	0.0	1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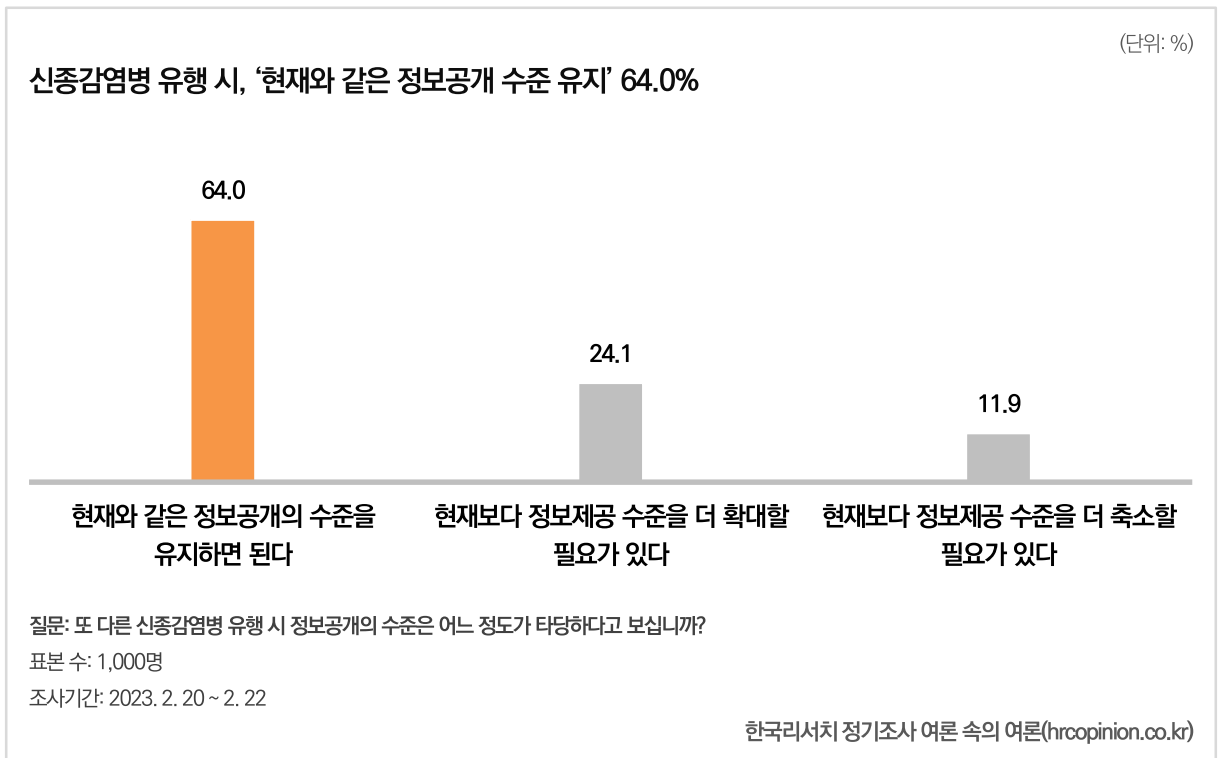
질문: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해나 활용이 어려웠습니까?
 표본 수: 코로나19 관련 이해 및 활용이 어려운 적 있었던 응답자 641명
 조사기간: 2023. 2. 20 ~ 2. 2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12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

신종감염병 유행 시, '현재와 같은 정보공개 수준 유지' 64.0%

신종감염병 유행 시, '현재와 같은 정보공개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는 응답이 64.0%로 가장 높았다. '현재보다 정보제공 수준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1%, '현재보다 정보제공 수준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11.9%였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제공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향후 다른 감염병이 유행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보제공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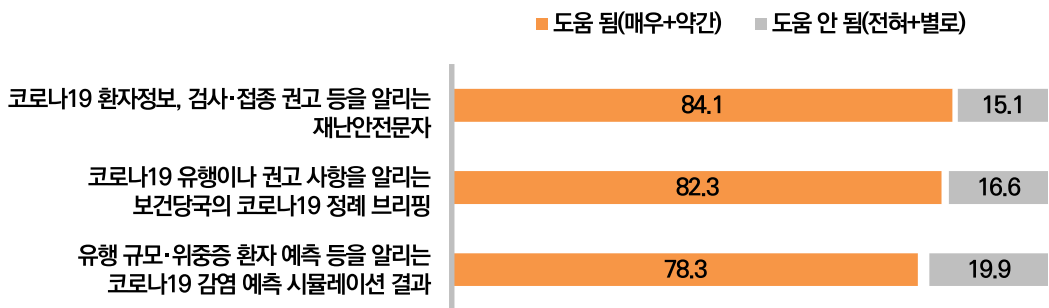
재난문자, 정례브리핑 등 보건당국 제공 정보, 도움 되었다는 긍정 평가 높아

네 명 중 세 명 이상이 보건당국이 제공한 정보가 코로나19 유행 이해나 대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환자정보, 검사·접종 권고 등을 알리는 재난안전문자(84.1%)’가 가장 도움 되었다고 답했고, ‘코로나19 유행이나 권고 사항을 알리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정례 브리핑(82.3%)’, ‘유행 규모·위중증 환자 예측 등을 알리는 코로나19 감염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78.3%)’가 도움 되었다는 응답도 높았다.

보건당국이 제공한 정보가 코로나19 유행 이해나 대응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는 60세 이상에서 특히 높아, ‘재난안전문자’는 94.0%,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은 90.3%, ‘코로나19 감염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는 89.3%가 도움 되었다고 평가했다.

(단위: %)

재난문자, 정례브리핑 등 보건당국 제공 정보, 도움 되었다는 긍정 평가 높아



전체	사례수 (명)	코로나19 환자정보, 검사·접종 권고 등을 알리는 재난안전문자	코로나19 유행이나 권고 사항을 알리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유행 규모·위중증 환자 예측 등을 알리는 코로나19 감염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1,000)	84.1	82.3	78.3
연령				
18-29세	(166)	77.3	84.2	74.5
30대	(151)	73.8	73.0	69.9
40대	(184)	83.1	77.2	71.6
50대	(194)	83.4	80.3	77.2
60세이상	(305)	94.0	90.3	89.3

질문: 보건당국이 제공한 다음의 정보는 귀하의 코로나19 유행 이해나 대응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표본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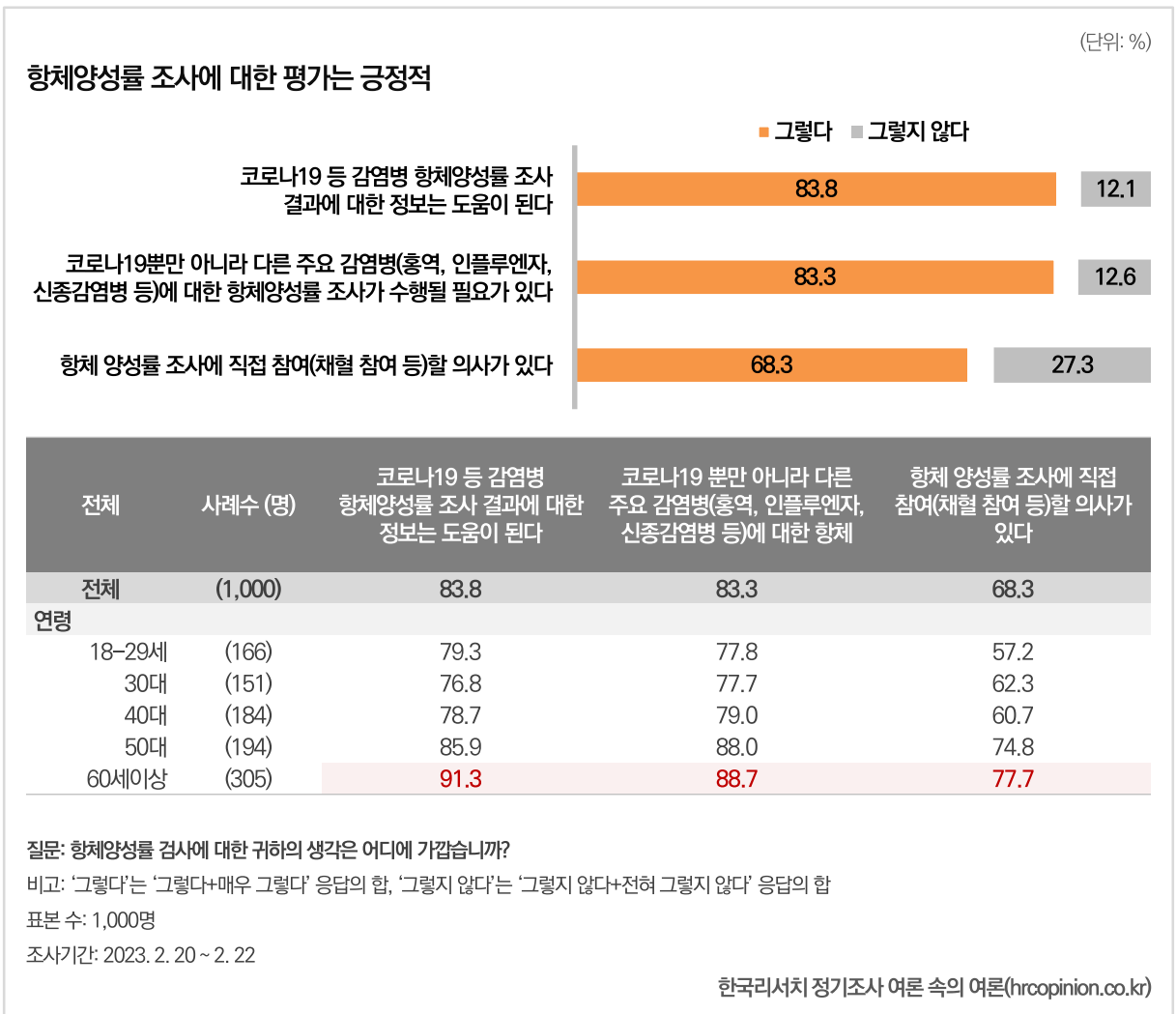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3. 2. 20 ~ 2. 2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13 코로나19 항체 양성 검사

항체양성을 검사에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

전반적으로 항체양성을 검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항체양성을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는 도움이 되고(83.8%)',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감염병(홍역, 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항체양성을 조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83.3%)'고 답했다. '항체 양성률 조사에 직접 참여(채혈 참여 등)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68.3%로 과반 이상이였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가 또한 긍정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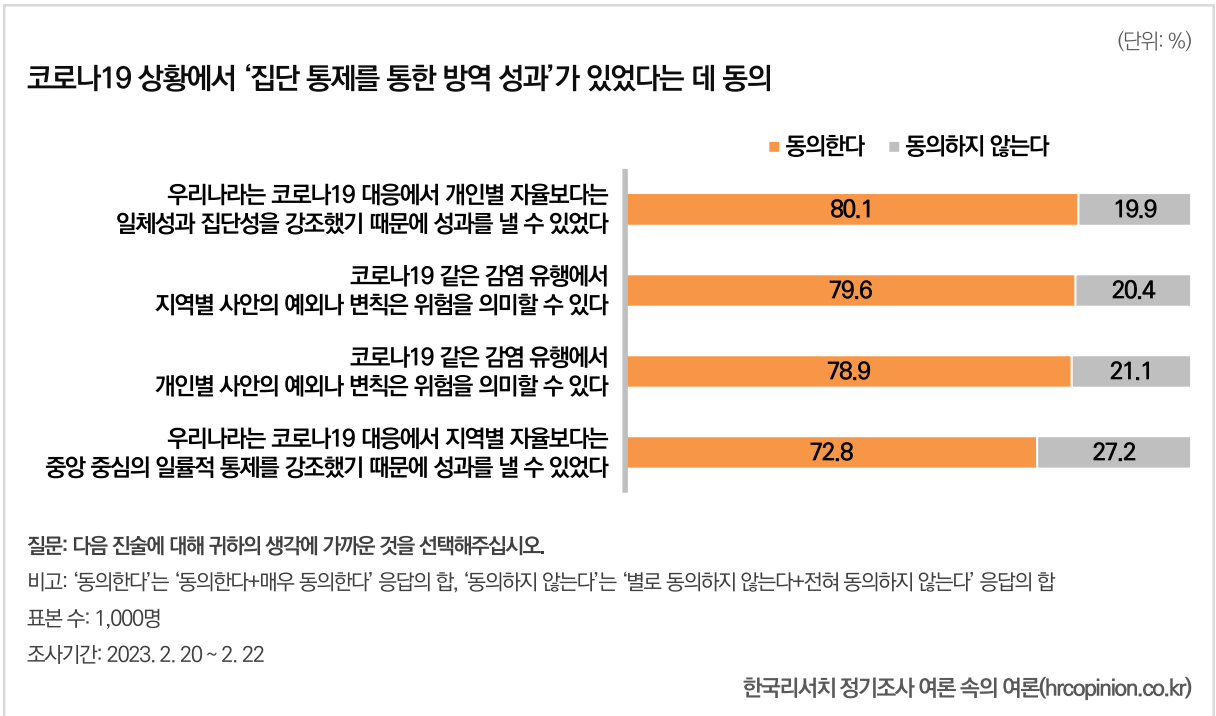


14

방역 규범

코로나19 상황에서 '집단 통제를 통한 방역 성과'가 있었다는 데 동의 단,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방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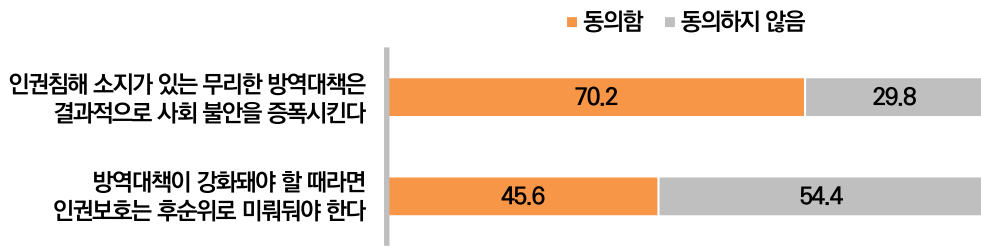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체성을 강조하고, 집단 통제를 통해 방역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였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에서 개인별 자율보다는 일체성과 집단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었고(80.1%)', '코로나19 같은 감염 유행에서 지역별 사안의 예외나 변칙은 위험을 의미할 수 있다(79.6%)'고 답했다. 이어서 '코로나19 같은 감염 유행에서 개인별 사안의 예외나 변칙은 위험을 의미할 수 있다(78.9%)',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지역별 자율보다는 중앙 중심의 일률적 통제를 강조했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72.8%)'는 응답 역시 70%대로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추진 시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우세하였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무리한 방역대책은 결과적으로 사회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진술에 70.2%가 동의했으며, ‘방역대책을 강화해야 할 때라면 인권보호는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는 데에도 절반 이상인 54.4%가 동의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집단 통제식 방역에 대해서는 높은 호응도를 보이지만, 그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인 것이다. 특히 30대 이하에서 인권보호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단위: %)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방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 의견 높아



전체	사례수 (명)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무리한 방역대책은 결과적으로 사회 불안을 증폭시킨다		방역대책이 강화돼야 할 때라면 인권보호는 후순위로 미뤄줘야 한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체	(1,000)	70.2	29.8	45.6	54.4
연령					
	18-29세 (166)	83.5	16.5	38.5	61.5
	30대 (151)	72.5	27.5	35.6	64.4
	40대 (184)	69.5	30.5	41.6	58.4
	50대 (194)	67.7	32.3	50.0	50.0
	60세이상 (305)	63.7	36.3	54.0	46.0

질문: 다음 진술에 대해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시오.

비고: '동의한다'는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응답의 합, '동의하지 않는다'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의 합

표본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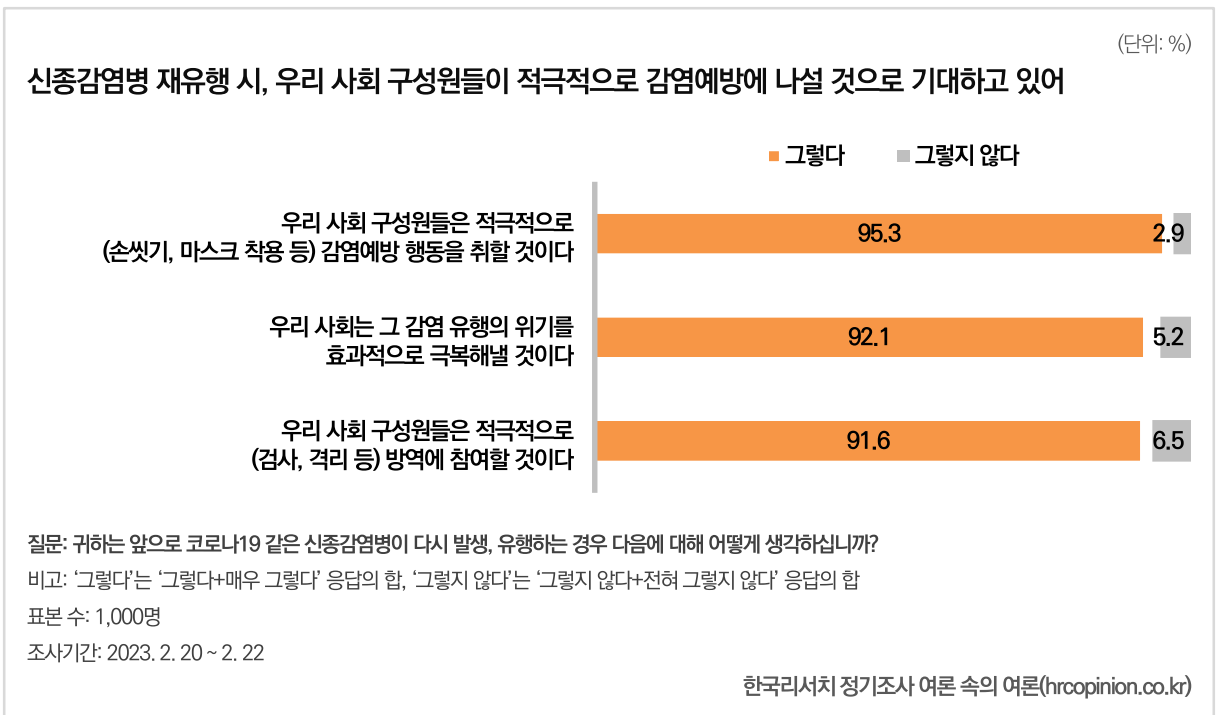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3. 2. 20 ~ 2. 2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15 미래 신종감염병 유행 대비·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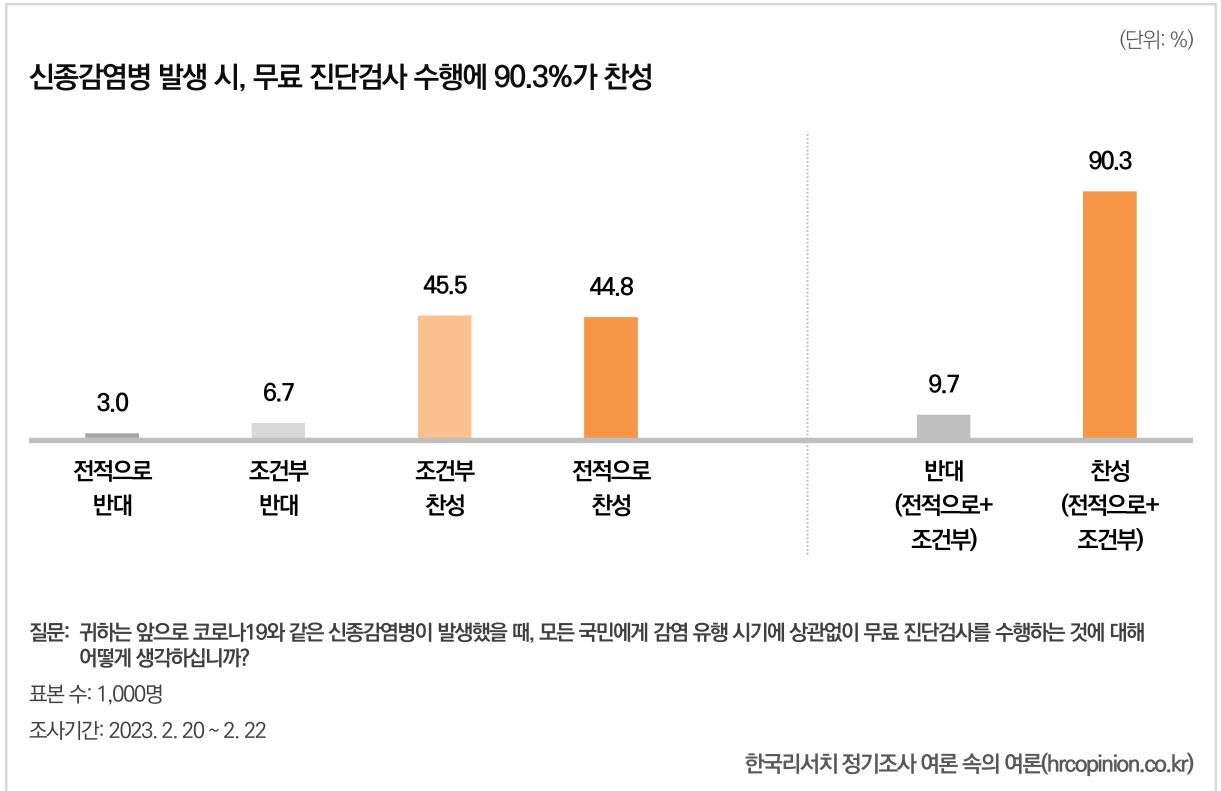
신종감염병 재유행 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감염예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향후 신종감염병이 발생 및 유행하게 될 경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적극적으로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응답이 95.3%, ‘우리 사회는 그 감염 유행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해낼 것(92.1%)’,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적극적으로 (검사, 격리 등) 방역에 참여할 것(91.6%)’이라는 응답 모두 90%대로 높았다.



신종감염병 발생 시, 무료 진단검사 수행 '찬성' 90.3% vs. '반대' 9.7%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감염 유행 시기에 상관없이 무료 진단검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이 90.3%로 매우 높았다(전적으로 찬성 44.8%, 조건부 찬성 45.5%). 반대 응답은 9.7%로 소수에 그쳤다(전적으로 반대 3.0%, 조건부 반대 6.7%).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Master Sample)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조사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3년 1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8,520명, 조사참여 1,349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1.7%, 참여대비 74.1%)
조사일시	• 2023년 2월 20일 ~ 2월 22일
조사주관기관	• 질병관리청
조사자문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이유빈 연구원
조사수행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Hankook Research

